

나라경제

3



03
9 77 1227 803309
ISSN 1227-8033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티티콜과 어울리면 대한민국이 다 보인다!

어디갈까? 

어떻게 가지? 

뭘 먹을까? 

잠은 어디서? 

 관광안내전화 **1330**
call center

관광안내전화 1330의 새이름 티티콜센터!

- 신속하고 편안한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 / 영어 / 일어 / 중국어 4개 국어 서비스 및 관광통역이 가능합니다.
-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일반전화 ➡ 1330 / 휴대전화 ➡ 02)1330

[TTcall]의 의미

TT란 Thirteen Thirty 즉, 1330 숫자를 의미하며
Travel Telephone, Tourism Technology, Travel Tips를 뜻하기도 합니다.

쇼핑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1601년 어느 날 오후, 런던의 템스강 남쪽 뱅크사이드에 위치한 글로브 극장 무대 위, 햄릿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렇게 그렇게. 그의 영혼이 그의 목소리에 실려 나올거렸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거친 파도처럼 밀려드는 재앙에 맞서 싸워 물리치는 것이 장한 일인가? ...” 햄릿의 목소리는 천지에 울려 퍼져나갔다. 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절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언어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불멸할 것이다.

천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종교의 시대가 물러가고 르네상스의 태풍이 몰아쳤다. 인간의 시대가 왔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그 거센 바람은 15세기 말 영국에 도래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셰익스피어(1564~1616)가 있었다. 그는 주옥 같은 37편의 극작품을 세상에 선물해 만인을 열광시켰다. 그 중심에 비극 중의 비극 ‘햄릿’(1601년)이 있다.

「햄릿」은 표면적으로 복수의 이야기다. 불의를 저지른 자를 응징해 불의로 초래된 정치적·도덕적 무질서를 회복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햄릿은 강대한 악의 세력과 힘겨운 대결을 벌이며 아우성친다. 인간의 삶이, 죽음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따위 세상이 어디 있던 말인가?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의문하는 인간, 그것이 햄릿이다. 그러나 햄릿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진실’이다. 그는 끝없이 상기한다. ‘진실은 무엇인가?’

덴마크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 있다. 햄릿의 아버지인 선왕이 갑자기 사망하고 왕위를 계승한 동생 클로디어스는 초



햄릿은 세상과
역사에 대해 진실과
양심을 저버린 적이 없는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존재였다.
인간의 삶과 죽음, 존재
의미를 의문하는 인간,
그것이 햄릿이다.

고속으로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다. “악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햄릿은 어머니의 근친상간적 결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악취가 진동하는 타락한 덴마크다. 햄릿은 한없이 슬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달리 본다. 클로디어스도 왕비도 희희낙락이다. 신하들은 새로운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기에 바쁘다. 도덕을 왜 문제 삼는단 말인가. 궁전은 서글프게도 침묵하는 인간들로 가득하다.

어느날 선왕의 유령이 나타나 자신은 동생에게 독살당했다고 고백하며 햄릿에게 복수를 명령한다. 햄릿은 그 과업을 아버지를 위한 사적인 복수를 넘어 뒤틀린 세상과 시대를 바로잡을 역사적 소명으로 받아들인다. 햄릿은 복수, 아

니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분투한다. 그 여정에서 인간과 세상에 대해 번민하며 자신이 정당하고 진실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하며 주저한다. 그러나 클로디어스의 시커먼 양심을 확인하자 그는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 그리하여 자신을 희생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복구한다.

햄릿은 세상과 역사에 대해 진실과 양심을 저버린 적이 없는 참을 수 없이 무거운 존재다. 셰익스피어는 말한다.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였고, 진실을 진실로 찾았으며, 복수를 복수답게 실행한 햄릿의 생을 보라.” 인간은 불완전하다. 양심의 거울은 매일 닦지 않으면 진실을 비추어볼 수 없다. 닻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작품 소개



안병대

한양여대 영어과 교수

1969년생. 한양대 영문학과 문학박사. 뉴욕 주립대 스토니 브룩 캠퍼스 방문교수 및 한국셰익스피어학회 공연 부회장 역임. 현재 학술 부회장. 저서로 「셰익스피어 작품 해설」, 「교양으로 읽는 영미 문학」, 「셰익스피어 연극 사전」, 「셰익스피어 읽어주는 남자」 외 다수가 있다.



특집

복지정책, 바람직한 방향은?

- 14**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속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6**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복지모델 만든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 18** 한정된 자원 감안해 '선택과 집중'
방기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 20** '일을 통한 빈곤탈출' 취업지원 확대·강화로 푼다
김형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서기관
- 22** 정치와 복지가 서로 발목 잡는 유럽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4**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 켜진 일본의 복지
배준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
- 26** 복지, 정말 달콤한가?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 28** 구체적 복지 프로그램별로 논의하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인터뷰

- 08** “‘당당한 한국인 이미지’ 문화·역사에서 길어올릴 것”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경제정책해설

- 44** 마이스터고를 취업명품학교로!
김환식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장
- 46**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
서보람 행정안전부 미래정보화과장
- 50** 농협 계약재배 늘려 채소값 폭등 막는다
임정빈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과장
- 53** 2018년 세계 로봇강국 실현한다
이중엽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사무관
- 56** 인터넷·모바일광고시장, 스마트 IT경제 이끈다
한정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사무관
- 58** 인터넷 상거래 보호 5만원 이상으로 확대
김홍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

세계는 지금

- 30** 국제금융기구 자원조치를 정부 내 상설화해야
이희수 기획재정부(전 IMF 상임이사)
- 33** 원자력발전에서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김봉수 주OECD대표부 참서관





집중토론

38 전세난, 원인과 해법은?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특별기획

64 개원 40주년 맞은 KDI 현오석 원장

“정부가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정책대안 제시할 것”

68 번영을 향한 경제설계에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에 이르기까지

조병구 KDI 기획조정실장

정책 그 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

90 복권 한 장으로 희망과 나눔을 산다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91 “복권법 목적 이미 이뤘죠, 이젠 업그레이드를 꿈꿀 때”

강준희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사무관

92 “어르신들의 공연관람 많이 늘어 보람”

김현주 한국문화예술평화관연합회 사업팀장

93 복권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사업이 없다

곽재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그들은 바쁘다

60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 일자리가 수직상승하는 그 날을 위해 문세원 주무관

70 나라경제 인사이드

韓 재정건전성은 양호, 문제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
김광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대학 교수

88 미래와 세상

소수세력의 원리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이달의 이슈

꺼지지 않은 유럽 재정위기

74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유럽

신현규 매일경제신문 지식부 기자

75 재정위기 확산 기로에 선 유럽 경제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76 환율의 조기경보 역할 상실한 유로화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8 회원국 간 경제적 불균형이 경상수지 양극화 초래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80 독일, EU경제 견인...통독 이후 최고 성장

조일규 KOTRA 프랑크푸르트 KBC 차장

82 스페인 가계부채, GDP의 85%에 육박

홍정아 KOTRA 마드리드 KBC 과장

84 유로단일통화체제의 근본적 재편은 불가피하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86 유럽 전체의 혼란은 조만간 수습될 것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칼럼

- 03 천천히 걸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병대 한양여대 영어과 교수
- 36 나라 밖 경제**
과대 평가된 인플레이션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37 외신이 본 한국경제**
글로벌 확장에 박차 가하는 한국 기업들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42 유정아의 소통의 기술**
“식사는 하셨습니까?”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
- 72 It's App**
“스마트폰으로 통신비 아끼세요”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 95 행복한 중소기업**
“국산시리얼의 힘을 보여주마!”
오기철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부장
- 96 수수께끼 서양미술사**
카라바조(Caravaggio)의 ‘예수의 매장’
정성범 미술사학자
- 98 그길을 걸었다 - 전라남도 완도**
바다와 섬의 절묘한 조화
이용한 시인
- 102 시평**
한·중 FTA, 조금증 버리고 신중한 접근을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나라경제

2011. 3 [제22권 3호 통권 244호]

발행 편집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편집인	현오식 KDI 원장 박철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문형표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관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대행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신민식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과학기술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전용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최충균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윤성원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진홍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김보열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취재·편집기자	이재열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3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1년 2월 28일(매월 말일 발행) 제22권 3호 (통권 244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 (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인쇄	성우에드컴(주)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
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키워주는 직업방송!

www.worktv.or.kr

아직도 직업방송을 모르시나요?

희망을 꿈꾸는 당신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방송이 성공취업과
직업능력개발을 도와드립니다.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한국경제TV에서 시청가능)

인터넷 직업방송은 회원가입만으로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때 _ 2011년 2월 14일 오전 10시
곳 _ 위원장 집무실(서울시 중구 저동)
대담 _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1947년 서울 生
이화여대 사학과, 서강대 대학원 사학 박사
1985년 3월~현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2000~2006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원장
2006~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
2006~2010년 이화여대 총장
2008~2009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2009~201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09년 7월~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회의 위원장
2009년 12월~현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2010년 10월~현재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국 가 브 랜 드 위 원 회 위 원 장

이배용

“‘당당한 한국인 이미지’
문화 · 역사에서 길어올릴 것”

다가오는 3월이면 취임 6개월이 되신다.

그동안 많이 바빴다. 자리를 맡자마자 인도네시아로 가서 ‘한국주간’ 행사를 치렀고, 곧이어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내용의 준비 등에 힘썼다. 공익광고 캠페인 추진, 사전 불업을 위한 원로정상회의 개최 등이 그것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뒤에서 조력하는 일도 많이 했다.

대학총장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웃음). 한국사를 수십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국가의 앞날과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은 항상 내 생활과 학문 속에 존재해 왔다. 이화여대 총장 때는 이화여대가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할 때는 정부·대학·고교·초중등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어 대학뿐 아니라 전체 교육의 미래를 모색해 보기도 해서 실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생소하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브랜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미지뿐 아니라 신뢰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품격, 즉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면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호감도도 있어야 되고 그들의 지지도 있어야 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총합적인 국가의 미래, 세계적인 신뢰·지지 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일을 하니깐 어떻게 보면 일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다국적 브랜드 평가기관인 안홀트 GMI가 발표한 국가브랜드지수(NBI)에서 한국은 30위를 기록했다. 한국 국가브랜드 경쟁력을 어떻게 보나.

평가라는 것이 항상 절대적인 객관성을 갖지는 못한다. 사이먼 안홀트가 개발한 지표에서 우리가 30위를 했지만 모든 측면을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내부에서 조사한 것은 50개국 중 18위였다. 그런데 18위든 30위든 우리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기술력이라든가 과학, 경제력 부분은 높은 평가를 받는데, 문화·관광·국민성과 같은 부분들은 저평가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평생 역사를 연구해온 나로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쁘게 평가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살아보면 알지 않나. 다만 지금 평가가 이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된 것이고, 개발을 하지 못한 것이고,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세

계적으로 뛰어난 한국제품이 ‘made in korea’란 이름표를 달았을 때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디스카운트를 당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와 역사를 명품화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브랜드위원회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더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고, 내부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통합적으로 생각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일반국민에게 ‘국가브랜드’란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 그리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은 한두 번의 대형행사나 캠페인으로선 요원하다.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신생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리 땅에 녹아든 문화의 가치가 깊다. 하루아침에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것을 캐야 한다는 얘기다. 유구한 역사 속에, 땅속에 묻혀있던 많은 보석들을 찾아내 정성 들여 닦아 찬란히 빛내야 한다. 물이 어떤 경우는 시냇물로 흐르지만 어떤 경우는 땅속으로 보이지 않게 흐르면서도 결국 바다를 향해 가지 않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문화다.

안 보이는 것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학창 시절 경복궁에 그림 그리러 많이들 가지 않았나. 경복궁에 펼쳐진 돌들과 돌집승들의 형태 등을 보면 과거의 정치 곧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요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졌었나. 문화현장에 가면 돌들이 내게 말을 건네 온다. 내가 사람으로서 생명을 가졌다면 돌은 역사와 시대의 생명을 가진 거다. 돌들이 거기에 놓인 이유를 그들의 마음과 언어로 들려주니 수십 번을 가도 지루하지 않다. 이런 가치들이 온 나라에 가득하다. 역사란 우리의 정신이요 뿌리다. 이런 역사와 문화를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뿌리가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

옳은 말씀이시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못 찾고 어떻게 외국에 우리 것을 잘 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바로 그런 얘기다. 사람의 형태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언어라든가 분위기에서 풍겨나오는 품격이나 철학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느낀다. 옷만 잘 입고 나와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다. 브랜드위원회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영혼

Interview

을 찾고, 또 미래를 향해 노력할 수 있는 가치와 메시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요즘 세계가 화두로 내세우는 화합·생명·나눔·녹색 이런 것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수없이 강조했던 것들이다. 경주 최부잣집도 그렇고 신라 시대에도 그렇고, 진정한 나눔 정신이 우리 역사에서 이어져 왔다. 아이들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석재 KT 회장께도 'IT 시대에 인간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 따뜻한 체온을 주고 생각을 넣어줘야 한다'고 늘 말씀드린다.

문화를 중시하는 분이 국가브랜드위원장으로 오셔서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라는 게 아주 간단한 것이다. '저 사람 능력은 참 괜찮았는데, 뭔가 거칠고 덜 다듬어졌어'라고 말할 때 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음해하지 않는 것이 문화다. 성현들은 생각을 바르게 하면 얼굴의 모양과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 표현도 바르게 나온다고 했다. 구태의연한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 사는 일이다. 사람사는 도리를 다할 때 경쟁은 열정이 되고 좌절은 도약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렇다면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친절할 수 있어', '우리도 정말 따뜻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국가브랜드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이 매우 친절하게 보이는데, 우리도 하면 되지 않나. 그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한민국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도록 친근함으로 흡인을 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푹푹 뭉쳐서 세계가 우리에게 호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업무상 외국인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들에게 우리 역사를 어떻게 소개하나.

문화는 얼굴과 인종과 국경이 달라도 마음속에 감동을 준다. 서로 공명할 수 있게 해준다. 외국인들과 문화현장에 같이 갔을 때 짧게라도 그곳과 관련된 당시 정치·생활상 등을 말해주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들은 바로 마음을

연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여운을 갖는다. 현장에 같이 못 나갔을 때는 역사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맥락들, 선조들이 어떻게 역사를 풀어갔는지를 얘기해주는데, 그것이 대화의 품격을 달라지게 한다. 그들은 금방 가까운 친구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른테면 신선로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다. '우리 음식에는 먹고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학적인 것뿐 아니라 과학적 지혜가 있다. 각 음식재료에서 나오는 독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 신선로다. 실제 견과류는 육류에서 나오는 독소를 상쇄해준다. 그러면서 신선로는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다. 시각적으로 열십자를 이루면서 동시에 동심원을 그린다. 이렇듯 조화·화합·아름다움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이것은 신선(神仙), 즉 음식을 통해 윤토피아를 꿈꾸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했을 때 서로가 공명의 하모니를 이루며 감동하는 것을 느꼈다. 창덕궁 가서도 그렇다. 궁궐 후원의 논 두 평을 보여주며, 임금이 백성의 수고로움을 함께 체험하고 농사의 소중함을 왕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직접 벼를 심고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해주면 그들은 경탄하고 감동한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그때 그 말씀으로 가슴이 따뜻해졌고,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온다.

올해 브랜드위원회는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올해는 G20 서울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와 함께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우선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규모를 대폭 키워(2012년까지 5만명 파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서로 화답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려 한다. 또 하나는 문화 브랜드의 강화다. 우리 문화자산 등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 I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브랜드화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위원회가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경제적인 마케팅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문화 브랜드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홍보대사로, 외교사절로, 문화해설자로 함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 8월에 브랜드위원회 종합 전람회를 한다. 한류 등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우리가 몰

“

잘사는 나라뿐 아니라 좋은 나라, 바르게 사는 나라로 인식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의 기둥을 세우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한 한국인과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에 한국의 실체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다.”



랐던 부분을 좀 더 소통하고 선양하는 한편 향후 어떤 것을 풀어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한다. 그 외에도 한국에 호감이 있는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10만명’을 확보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선덕여왕’을 드라마로 제작할 것을 방송국에 권유한 주인공이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선덕여왕’을 추천한 이유는?

20세기 후반 들어 세계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별로 햇빛을 못 본 여성의 역할들에 대한 조명은 아직 부족하다. 삼국통일하면 김춘추, 김유신을 많이 생각하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하면 그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인 왕이 발탁해 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해안을 가진 이가 바로 선덕여왕이다.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역사 속의 많은 생명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다. 소서노, 신사임당, 김만덕, 안동 장씨. 이런 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동안 남성 중심의 시각과 관점을 바꿔보자. 그렇다고 남성의 역할을 뒤집어엮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에서 드라마 ‘선덕여왕’을 추천한 것이다. 세종대왕도 한국역사 속의 최고 리더로 추천하

고 싶었지만 다른 방송국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웃음).

이화여대 총장 재임 시절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몇 단계 끌어올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국민 개개인이 품격을 올릴 때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의 밝은 모습, 화합된 모습들이 세계에 많이 알려질 때 대한민국의 저력, 역량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는 잘하다가도 어그러질 때 그 모습이 더 부각되는데, 그런 때일수록 한층 더 서로를 격려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다가갈 때도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그러면 세계도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모여들 수 있지 않을까. 잘사는 나라뿐 아니라 좋은 나라, 바르게 사는 나라로 인식돼야 한다. 나 역시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의 기둥을 세우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한 한국인과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여기에 한국의 실체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다. 



쓰는 물이 많으면,
먹는 물이 부족해집니다

지구 전체의 물 중 1%만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며,
가정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물은 1%의 식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절약하세요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회의



복지정책, 바람직한 방향은?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지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모든 국가는 필요와 가치구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다를 뿐 양자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 복지기반이 서구 선진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급격히 늘리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2011년 한국의 현실에서 재정 파탄을 막으면서도 복지 제도의 핵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나라경제』는 선진국의 경험과 정부 정책, 전문가의 제언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집중 조명해 보았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속 대한민국의 선택은?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bongjee@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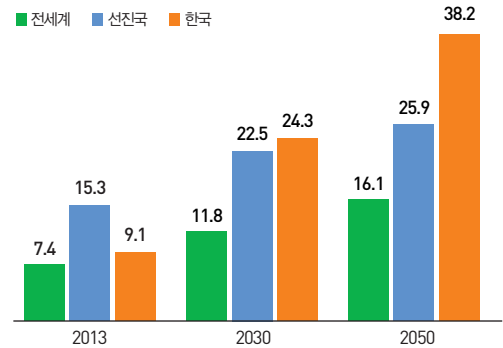
복지가 이슈다. 한겨울 정치권을 복지 논쟁이 후끈 달구고 있다. 국민의 관심도 높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서도 복지가 주요 이슈가 되리라는 전망이 대세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개념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1년, 왜 사회복지가 이슈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3차 사회안전망 구축 중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국가의 발달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사회의 사회복지 체계는 크게 3단계를 거쳐 발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보험을 통한 1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1차 사회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비교적 완성된 형태로 정착된 시기는 2000년대 초로 본다. 그 다음 단계는 사회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2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이러한 2차 사회안전망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기반 위에 복지가 발전하는 다음 단계는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3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삶의 욕구를 사회적

〈그림〉 선진국 대 한국 노인인구비율 전망

(단위: %)



자료: 유엔세계인구전망(2005)

로 충족하는 기능을 한다. 보육, 노인수발, 아동보호, 간병, 장애인수발 등의 대인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복지국가가 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중반에 1차 사회안전망과 2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거쳤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는 3차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제도가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조 제도가 한 사회의 최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일반 국민이 일상 삶에서 부딪치는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요구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3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영역이다. 복지국가가 발달 단계의 측면에서 2011년 대한민국에 사회복지가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복지가 주요 의제로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인 변화다.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1.2명대의 출산율은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사회적 파업으로 파악돼야 한다. 가구에서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는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에 맞벌이 부부는 대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니 ‘출산파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고령화도 주요한 문제다. 앞으로 약 15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게 된다. 낮은 출산율과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생산연령인구) × 100의 증가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을 빠르게 가중시킬 것이다. 현재 노년부양비가 약 15%인데 2030년에는 그 두 배가 훨씬 넘는 약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이제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서 그에 대한 대책인 사회복지가 국민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체질의 변화도 복지의 관심을 불러오는 중요한 이유다. 과거 우리나라는 1990년 이전까지 연평균 8~9%, 그리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고속 경제성장의 모범사례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빠른 경제성장과 실질적인 완전고용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었다. 즉, 특단의 사회복지적 대책 없이도 경제성장이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진입한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됐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만으로 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됐다. 소위 사회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절대빈곤층은 2003년 11.7% 수준이었던 것이 계속 증가해 2008년에는 14.9%에 이르렀다. 소득불평등의 수준도 높아져 2003년과 2008년 사이에 최상위계층 10%의 소득과 최하위계층 10%의 소득 간 비율이 약 17에서 28로 증가했다. 즉, 최근에는 상위 10%가 가진 총소득이 하위 10%가 가진 총소득의 약 28배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중산층의 축소로 귀결돼 사회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중산층이 언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르는 위

“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중반 1차 사회안전망과 2차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거쳐 현재 3차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사회보험 제도가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조 제도가 최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요구한다.”

”

험에 직면해 있고, 또 한번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다시 스스로 설 수 있는 통로를 찾기 힘든 사회는 사회통합이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힘든 사회다. 이러한 위기의 식도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이유다.

“사회복지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

정치적으로도 복지가 이슈로 등장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적 화두는 1970~1980년대는 경제성장, 1990년대는 민주화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들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이룬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다음 정치적 화두는 무엇일까.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는 어찌 보면 자연스레 다음 정치적 화두로 사회복지가 대두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사회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러한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제공하는 데 복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정책을 입안한 베버리지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 전후의 영국사회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주기 위해 탄생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정비와 구축이라는 복지개혁을 불러왔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양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이유다. **박희**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복지모델 만든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noh0118@daum.net

연 초부터 시작된 ‘복지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형 복지’, ‘맞춤형 복지’, ‘선별적 복지’, ‘창조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다양한 복지에 대한 이념과 전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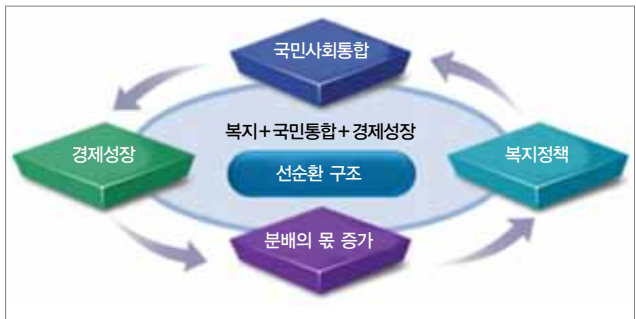
한편 유럽 각국에서는 금융 및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심화되는 추세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연금개혁 등 재정이 방만했던 일부 남유럽국가들은 최근 재정위기로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특정 시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진정성과 열망을 가진 복지논쟁은 우리 사회를 위한 긍정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슬로건과 정책들이 ‘현실가능하며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내가 주장하고 요구한 복지의 비용부담이 우리 아들·딸에게 심각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 제공

우리나라는 그동안 4대 보험과 공공부조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구축했고 현 정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복지의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기본 틀이 완성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그림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체계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올해 보건복지부는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사회통합형 복지모델 구축이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사회-경제정책 통합으로 복지지출을 절감하고 국가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복지와 사회통합,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세대의 복지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자립과 자활의 적극 지원을 통한 탈빈곤 촉진이다. 개인별 빈곤원인과 역량 등에 따라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능력과 무능력자 특성에 맞게 공적부조 제도를 개선·보완해 근로능력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한다.

〈표〉 취·창업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취업-취업프로그램(고용부)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4만1천명)
- ▶ 창업-자활공동체 등을 통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5천명)
* 자활공동체: 2010년 1,200 → 2011년 1,400 → 2012년 1,700개
- ▶ 자활-자활근로사업 참여(2만4천명)
* 자활사업 사업단: 2010년 2,700 → 2011년 3,000 → 2012년 3,500개

셋째,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구축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해 더 많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공공기관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발굴·보호할 것이며 맞벌이·다자녀가구 등과 자녀

“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사회-경제정책 통합으로 복지 지출 절감과 국가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와 사회 통합,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세대의 복지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해 더 많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양육부담 경감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보육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넷째,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와 사회통합 실현이다. 사회지도층과 소외계층을 연결하는 휴먼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지도층이 솔선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것이다.

다섯째,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내 복지 사업을 통합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및 중복·누락을 방지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 민간의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재장 낭비는 절감하며(-) 효율적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 시너지를 배가해(×) 국민의 부담을 나누어(÷) 복지정책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끊임없이 소통할 것을 다짐한다. 나라경제



지난 1월 17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을 방문, 종종 장애 아동을 만났다.

한정된 자원 감안해 ‘선택과 집중’



방기선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ksb24@mof.go.kr

최 근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토론으로 뜨겁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복지혜택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지가 소시민들의 모임에서도 이야기거리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모습을 올해 복지예산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올해 복지예산의 특징은 한 마디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을 편성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결과

“

정부는 생애단계별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과제 8개를 선정했다.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은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 부문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중점을 뒀다. 여기에는 총 3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

로 우리 경제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완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경제나 위기가 오면 서민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어렵게 되고 회복과정은 가장 늦다.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제성장의 혜택을 나누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2011

〈표〉 8대 핵심과제 부문별 예산

(단위: 억원)

8대 과제		2010년(A)	2011년(B)	증 감(B-A)	%
합 계		291,682	321,662	29,980	10.3
생애 단계	① 보 육	27,306	32,879	5,573	20.4
	② 아동 안전	1,205	2,074	868	72.0
	③ 교육·문화	7,366	13,944	6,578	89.3
	④ 주거·의료	147,287	155,661	8,374	5.7
취약 계층	⑤ 장애인	3,678	6,186	2,508	68.2
	⑥ 노 인	33,669	35,813	2,144	6.4
	⑦ 저소득층	70,578	74,221	3,643	5.2
	⑧ 다문화가족	594	884	291	49.0

년 서민희망 예산의 목적이다.

올해 복지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5조2천억원 증가한 86조4천억원이다. 정부 전체 예산 규모가 309조1천억원인데 여기서 28.0%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원 규모와 함께 내용도 중요하다. 정부는 전체 복지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과제 8개를 중점 지원한다. 핵심과제는 생애단계별로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했다. 생애단계별 핵심사업은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 부문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는 모두 3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서민희망 8대 과제 중에서도 지난해 9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3가지 과제는 이번 서민희망 예산을 가장 잘 대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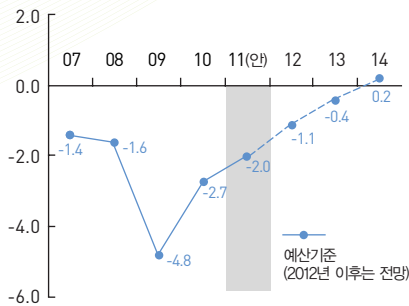
첫째,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만 0~5세 아이를 보내는 보육가정의 70%는 비용 걱정이 없도록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서민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일반고에 비해 특성화고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비율이 일반고의 2배이고 결혼가정 비율은 4배에 달한다. 이들이 취업해 중산층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신설하고, 전문대 우수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교육비 지원을 확충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직업 교육과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여성이라 자녀의 교육여건도 취약하다. 다문화가족은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의 0.7% 수준이나 2050년에는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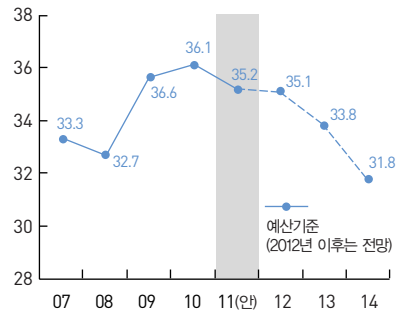
〈그림 1〉 재정수지 추이

(GDP 대비 %, 년)



〈그림 2〉 국가채무 추이

(GDP 대비 %, 년)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

올해 서민희망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됐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고려해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했고, 자립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서민희망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을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도 관련 소요를 충분히 반영했다. 늦어도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GDP 대비 30% 초반으로 개선할 계획이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빨라 향후 급격한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지출은 의무지출적 성격이 강해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가 없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재원 확보에는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복지의 양적 확대는 '우리'(세금) 또는 '우리 아이들'(국가채무)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선정과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201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올해 서민희망 예산을 점검하고 보완하려고 한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하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취업지원 확대 · 강화로 푼다



김형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서기관
na9940@moel.go.kr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
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지난 2007
년 14.8%에서 2008년 15.0%, 2009년
15.2%로 높아졌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도 2007년
10.2%에서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빈곤층으로 진입하거나 빈곤상황에
서 벗어나는 데 있어 1차적 요인은 ‘근로소득의
증감’이라는 노동연구원 2006년 연구결과는 정
책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 가구적 특성 등으로 근
로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을 제외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출발은 이들이 일자리
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정책과 연계해
검토돼야만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5만명으로 확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 경제
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자활성공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빈곤선상
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지속하고 있는 빈곤층, 특
히 일할 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은 기본적인 생계유
지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이들이 원활하게 노동시
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

‘일하려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정
책을 수립 · 추진할 것이다. 특히 ‘탈수급한 사
람’이 다시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제적 빈곤
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빈곤가구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다.

첫째, ‘일하려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체계적 취업
지원을 확대 ·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
동부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층의 노동
시장 진입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을 중심으로 유관사업을 통합하
고, 그 규모 또한 확대해 2010년 3만명에서
2011년 5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직업훈련 참여 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기
부담(20%)을 면제하고, 저학력자 대상 기초직업
능력 향상 과정 등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해
이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려 한다. 동시에 재정지
원 일자리사업 우선 참여 등 일반 노동시장 진입
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채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최대 860만

원) 제도를 신설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9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48만명(시설수급자 8만6천명 제외) 중 근로능력자는 28만명인데 이들 중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부과되는 자활대상자는 약 13%인 4만2천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부분이 조건부과 제외자 또는 유예자로 분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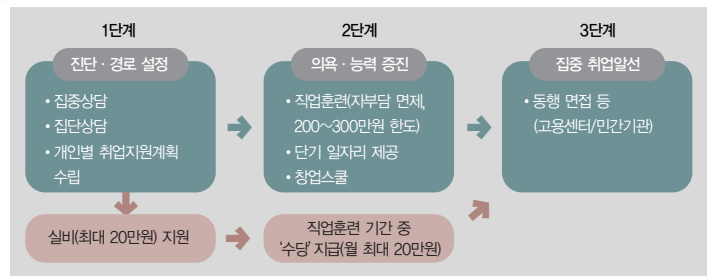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통합급여; all or nothing) 관련 제도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짜 수급자 문제가 언론의 1면을 장식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선정 및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자활대상자 분류가 보다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자활지원 상담사’를 1명씩 배치(2011년 시범실시, 48명)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근로능력 유무 판별, 자활대상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토록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와 함께 ‘사례조정회의’ 운영을 통해 반복 수급자의 근로능력 및 급여지급 중지 등 객관적인 판단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로능력자가 복지제도에 안주하지 않도록 급여체계를 ‘탈수급 촉진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빈곤가구 자녀에 학업 멘토링·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

셋째, ‘탈수급한 사람’이 다시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일정한 요건충족을 전제로 각각 ‘취업성공수당’과 ‘탈수급축하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취업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자에 대한 교육·의료급여 등의 한시적 지원 연장 및 지원요건 완화 등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탈수급 친화적 개선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넷째,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빈곤가구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중요하다. 수급자가 가구 자녀의 기술습득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 신입생과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대상자 선발 시 수급자가 가구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모집 시 이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곤가구 자

〈그림〉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개관



지난해 9월 27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고용차별 개선 길거리 캠페인에서 모델들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거리 퍼포먼스를 벌였다.

녀에 대한 학업 멘토링 및 마이스터고 입학 기회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빈곤탈출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은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양적 확충과 복지제도의 근로연계기능 강화라는 질적 효율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으로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요구된다. 최근 복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캐머런 총리의 “다시는 일하는 게 잘못된 경제적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한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유관제도의 지속적 보안을 통해 보다 많은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든든한 ‘희망사다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남희

정치와 복지가 서로 발목 잡는 유럽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kimjinsoo@
yonsei.ac.kr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재정 부담과 적자 누적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한계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혁에 대한 구체성을 찾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지만, 개혁 논의가 확대되기보다는 서서히 녹아서 실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무력감과 실망감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자유시장경제의 한계와 병폐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시된 유럽복지국가의 다양한 시도는 역사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키고 정제해 성숙화를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복지국가의 사회복지 는 상당기간 몸살을 앓고 있다.

무기력한 정부, 신자유주의에 책임 떠넘겨

그 이유는 정치와 사회복지의 상호 종속관계에 기인한다. 유럽은 소위 복지황금기로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정당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에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사회복지 확대했다. 이는 정치가 사회복지를 선거에 이용하는 사회복지의 정치종속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축소돼야 할 사회복지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됐다. 즉, 유럽은 거꾸로 사회복지에 정치가 발목이 잡히는 정치의 사회복지종속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유럽 사회복지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사회복지 문제의 심각성은 재정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다. 가

장 먼저 사회복지를 다루는 정부의 무기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의 무모한 확대에 대한 비판적 지적과 다양한 개선 대책에 대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로 그리고 정권 유지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책과제로조차 다루지 않았다. 사회복지 개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집단의 반발을 의식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무마하는 관행에 익숙해져 있던 모습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진행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후에야 개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다른 문제는 유럽 국가의 무책임한 태도다. 유럽 정부들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모든 것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취해 왔다. 사회복지 재정위기는 사회복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의해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발생된 시장에서의 노골적 약육강식과 심각한 양극화 현상, 자연적 변화이기는 하지만 고령화 등 주변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고, 사회복지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로 나타난 무거운 짐을 지는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즉,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에 대해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물론 이러한 상황 인식과 태

도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유럽복지국가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대부분 유럽에서 사회복지 개혁이 상당 수준 진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개혁의 결과를 보면 EU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이 GDP 대비 25% 수준에서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재정지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증가 현상과 GDP 성장 둔화로 인해 사회복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도 있겠지만, 개혁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가 미진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EU국가의 사회복지지출 평균이 최근 크게 낮아져 25%를 약간 상회하는 것은 동유럽국가의 EU 참여 확대로 평균이 낮아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 문제점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비 태세를 들 수 있다. 미래 예측은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 판단을 하는 대표적 기관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가 2009년 실시한 독일 분석(1960~2070년)이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사회복지지출은 2015년을 기점으로 상승해 2050년에는 적어도 3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 기반이 가장 튼튼한 독일이 이렇다면 다른 유럽 국가의 사회복지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ILO가 긍정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걱정이 앞서는 것이 객관적 판단일 것이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생활과 인생에 있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복지국가는 실제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개혁 수행하면서도 인간 존엄성 확보 노력은 유지

유럽복지국가는 국가가 존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의 재정위기를 어떠한 시간과 비용적 희생도 치르더라도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는 제도를 포함하는 체제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유럽 국가의 사회복지에 있어 재정위기는 전체 사회복지 비용의 75%를 차지하는 노후보장과 보건의료 분야가 중심이다. 유럽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위기 극복은 노후보장과 보건의료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적자를 어떻게 안정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핵심을 유럽 국가들이 서서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징후도 나타나고



지난해 9월 29일 유럽노조연합은 벨기에 브뤼셀을 비롯해 14개국에서 정부의 긴축정책과 복지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사진은 경찰의 시위대 진압 모습

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 사회복지 개혁을 수행하면서 과거 복지확대를 하던 과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논리적 판단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유럽 국가들은 핵심적인 노후보장과 보건의료의 재정안정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일 것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줄이고 그 빈자리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를 단순히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기능성과 나이가 사회적 배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연금 급여를 삭감하면서도 최저연금제도를 보완해 연금의 기능을 확보하는 문제와 특히 장애인이나 이동을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배려를 하고자 세부적인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보장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한 빈틈은 면밀히 검토해 해결하는 제도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복지에 있어 과거의 낭비적이고 비논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과 함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근본적 철학을 지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국가가 우리에게 복지국가라는 장밋빛 허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했고, 새로운 재편과정에서도 인간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전제가 있다. 사회복지의 발전과 건전성에 발목을 잡는 정치와 사회복지의 종속화 사슬을 끊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본문]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 켜진 일본의 복지



배준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
bjh5432@unitel.co.kr

일 본은 우리보다 일찍 복지정책을 도입했고 복지수준도 높다. ‘복지 원년’이라는 1973년 이후 각종 복지제도의 급여수준이 대폭 인상됐고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은퇴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96%를 넘었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장성도 우리보다 훨씬 높다. 실업수당과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산재보상제도 또한 보호망이 세밀하고 보호수준이 높다. 가장 늦게 도입된 노인성 질환자 대상의 장기요양제도도 우리보다 먼저 도입됐으며 보호강도도 더 높다. 이밖에 살피본 5대 사회보험 외에도 질병예방과 공중위생,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사회보험과 질병예방 및 공중위생이 국민 전체가 대상이라면 저소득층 대상의 소득지원 제도인 공공부조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자가정과 지적장애인의 생활보호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는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다.

이하에서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에 초점을 맞춰 부담과 급여, 정부의 재정부담,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간의 제도변화로 일본의 ‘저부담·저급여’ 체계가 ‘저부담·중급여’ 체계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정부 재정적자 부담을 고려하면 이미 ‘중부담·중급여’ 체계에 근접하고 있다. 서구 사회보험 국가와 비교하면 부담과 급여 모두 그 수준이 낮지만 우리보다 높고 미국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국민급여율’(사회보장급여액/GDP)이 꽤 높은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더 늘어나면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GDP]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세부담 중대 시 그 수단을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일본에서는 낮은 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소비세 비중을 높이고 지방정부가 소득세 비중을 높이면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류와 정당에서 이 안이 유력한 세제개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보험료는 그 수준이 낮지 않고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조세보다 덜 선호되고 있다.

‘중부담·중급여’ 체계에 근접... 국민부담률은 더 높아질 듯

일본의 복지수준은 서구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간 조세부담을 낮게 유지해온 결과, OECD 국가 중 국가부채 규모가 가장 크고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도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다. 지난 35년 이상을 현 세대의 고소득층과 기업에

“

日 민주당이 ‘중부담·중급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원조달방안 중심의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고부담·고급여’ 체계로의 이행을 전제로 세제와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

대한 증세 대신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으로 복지재원에 충당했다. 그런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자 일본 국채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국가 전체의 신용도까지 떨어지고 있다. 채권발행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자금처럼 의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여유층의 과세 강화로 복지재원 조달 루트에서 조세비중이 커지면 머지않아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지금의 독일과 스웨덴의 중간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일본 민주당은 자녀보육수당, 고교 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의 3대 무상복지 공약을 앞세웠으나 1년 6개월 동안 일본 국가부채는 50조엔(약 670조원)이나 급증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 등 증세 정책안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쇼핑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일본 아메요코 재래시장

급격한 복지제도 확충,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

세 부담이 높아지면 별생각 없이 지급받던 각종 복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적정 수준인지,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로 낭비되는 재원은 없는지, 아동과 장애인, 모자가정과 지적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저소득층 대상의 지원방식과 지원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든지, 무상급여와 서비스를 유상화하고 규모와 적용대상을 줄이는 것은 어떤지 등의 얘기다.

현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지의 질을 유지하면서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9년 9월에 발족한 민주당 연립정권은 2011년 2월 현재 방안을 모색 중이며 6월경 개혁 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관심의 포인트는 시안이 ‘중부담·중급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원조달방안 중심의 안인지 아니면 ‘고부담·고급여’ 체계로의 이행을 전제로 세제와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근본적 안인지하는 것이다. 전자는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주의적·가족의존적인 복지철학 아래 복지재원을 국채발행 대신 소비세 증세로 조달하자는 발상이다. 아울러 비영리조직(NPO)과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재원지출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생각이다. 후자는 초고령사회에서 복지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담·고급여’ 체계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므로 소비세 증세에 입각한

국가주도 복지정책으로 선화하자는 발상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영미형 자유주의와 대륙형 보수주의를 혼합한 전자 유형의 개혁을 전망한다. 하지만 민주당내 일부를 포함해 스웨덴의 국가주도 사회민주주의형 복지서비스 체계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사회민주주의형을 부분적으로 혼합한 방식으로 개혁한다면 이행과정이 길지 않고 비용도 억제하면서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일본의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다. 우리보다 보험료는 다소 높지만 보장성이 높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다. 지면계약으로 사회보험으로 뭉뚱그려 다뤘지만 배울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제도의 경우 1973년을 전후한 급격한 복지제도 확충과 이후의 충실화 작업으로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호주 금융연구센터(ACFS)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의 연금제도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4개국 중 13위로 중국보다 나은 뿐이다.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사례는 복차지계(覆車之戒)를 떠올리게 한다. 앞수레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니 뒷수레는 미리 조심하자는 말이다. 한겨레

복지, 정말 달콤한가?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hspark@kijf.re.kr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다른 OECD 국가의 2/3 수준인데, 이는 보건·복지 지출이 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가 1/3 수준인 것은 복지제도 자체의 커버리지가 보장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이 적립단계(2009년 중 보험료는 23조9천억원인 반면, 연급지급은 7조5천억원)에 있으며 아직 노인인구비중(11.0%)이 다른 OECD 국가들(평균 15.5%)에 비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2005~2011년 중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9.3%로 총지출 증가율 6.7%를 크게 상회해 복지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24.2%에서 2011년 28.0%로 높아졌다. 이러한 압축적 복지지출 증가 과정에서 비효율도 누적되고 있어 이미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복지지출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가 핵심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확대에는 반드시 대가 따른다

경제학 교과서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말이 있다. 이 ‘공짜 점심’이라는 말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사 마시는 단골손님에게 점심을 공짜로 준 것에서 유래했다. 물론 공짜로 먹은 점심값까지 술값에 포함돼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짜 점심은 무료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공짜 점심은 있다’는 주장이 들린다. 공짜 점심이 나중에 본인이 내야 할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내줄 수도 있단다.

〈표〉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2008년 또는 2009년 기준)

(단위: GDP 대비 지출규모, %)

	우리나라	여타 OECD 평균	비율	복지국가 유형별 구분		
	(A)	(B)	(A/B, %)	자유주의형	사회민주주의형	보수조합주의형
재정규모	30.4	47.3	64.3	41.9	53.5	51.5
보건+복지	7.7	23.9	32.3	19.5	29.4	28.7
이외지출	22.7	23.4	96.9	22.3	24.1	22.9
- 경제	7.7	5.6	137.8	5.0	5.3	5.2
- 공공+국방	8.3	9.8	84.9	9.4	10.0	10.4
- 교육	5.0	6.0	82.3	6.4	6.8	5.4
- 기타	1.7	2.0	85.4	1.6	2.0	1.8

주: 자유주의형(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사회민주주의형(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보수조합주의형(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자료: OECD, Annual National Account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부터 ‘저부담·저복지’의 패러다임 아래 다른 나라보다 높은 투자율과 저축률을 통해 고성장을 추구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경제정책을 유지해 왔다. 앞으로 경제체제를 ‘고부담·고복지’ 또는 ‘중부담·중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낮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과거 영국과 같은 복지병이 초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짜 점심’은 없고 선택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일례로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고 정부부채 규모 등 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EU 가입 등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자 복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됐는데,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국가재정이 더 이상 복지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위기가 야기됐다. PIIGS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큰 수준이었지만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컸던 것이 문제였다. 재정위기가 발발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의 대부분이 복지제도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이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부담 안 늘리면 일본 사례 되풀이할 수도

국민들은 정부가 국가운용의 핵심인 재정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해 미래 경제·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불안감 해소 및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적·실증적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현재 11%로 G7 국가 평균(17.7%)의 2/3 수준에서 2030년경에는 24.3%로 G7 국가 평균(24.8%)과 비슷해지고 2050년 38.2%로 G7 평균(28.6%)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중장기 복지재정추계모형에 따르면, 현행 보건·복지제도가

“

향후 우리 재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부담과 통일비용으로 인해 조세 등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일본재정과 같은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현재의 다소 미흡한 복지제도라도 이룰진대 하물며 지금 당장 복지수준을 더 높이면 그 파장이 시간을 두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향후 보건·복지지출 규모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2030년에는 GDP 대비 14.4%로 미국 수준, 2040년에는 17.7%로 일본 수준, 2050년에는 20.8%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세를 하거나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2050년의 국가채무 규모가 현재 33.8%의 3.4배 수준인 115.6%로 증가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이외 분야의 지출규모는 다른 OECD 국가들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고 복지국가 유형별로 보건·복지 이외 분야의 지출규모가 비슷하므로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오히려 남북통일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감안한다면 향후 우리 재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부담과 통일비용으로 인해 조세 등 국민부담을 늘려나가지 못하면 일본재정과 같은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현재의 다소 미흡한 복지제도라도 이룰진대 하물며 지금 당장 복지수준을 더 높이면 그 파장이 시간을 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세대는 자신의 복지수준을 대폭 낮춰야 하고 세금폭탄만 맞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자 복지정책 논의의 중요한 토대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2009년 현재 OECD 국가 중 27개국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고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해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뿐 아니라 모든 지출 분야에 걸친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세원확충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이러한 미래대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추진의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복지 프로그램별로 논의하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yhkim@khihsa.re.kr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률만 둔화된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도 급속히 진행됐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영세 자영자의 부진 등으로 중산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이 증가되는 소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팔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서민경기는 여전히 썰렁하다.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전략이 중요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통합과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가 본격 시행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와 장애인연금제가 도입됐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미소금융,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보증자리주택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와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출을 대폭 증가시켰으나, 제한된 재정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고루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1% 수준으로 아직 고

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 2011년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최대 수준이고 유소년 부양률까지 감안하면 총부양률은 거의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2020년 이후부터다. 노인인구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계층에서 소비계층으로 전환되면 국가적 부담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 측면의 전략으로 볼 때 과거 10년과 향후 10년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7년 이후 4%대로 급전직하했다. 앞으로의 10년마저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의 초고령사회 파고를 넘기 힘들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절대 없다고 할 수 없다.

복지국가는 유럽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최상위 정책목표였다는 것을 상기할 때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만, 우리는 선진 복지국가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면서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 발전시키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호황기에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룰 수 있었지만 제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고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수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구 선진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수지 회복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국민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실현가능한 단계적인 재원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미흡한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확충까지 고려하면 재원조달의 한계에 봉착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결여돼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지출은 2010년에 1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복지지출비율 20%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노인인구 11%라는 복지수요를 감안하면 대체로 선진국의 2/3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2/3라는 숫자는 소위 OECD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20년간 복지가 성장보다 빠른 속도로 제고된 것도 사실이다.

복지 수준은 단순히 거시적 수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실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립돼 있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지만, 대체로 사회보험 중심의 독일·프랑스·일본의 복지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지만 보장의 전제로 보험료 납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능력이 없는 상당수 국민이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강 보장의 경우 대부분 국민이 제도 내에 포함돼 있지만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의 존재로 보장률에 대한 시비가 있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거대담론적인 보편이나 선별이나의 탁상논쟁보다는 구체적인 복지 프로그램별로 국가 책임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성 낮은 복지제도 개혁 시급해

복지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목표치가 있다 해도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2050년경에는 추가적인 복지확충이 없다 해도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현재의 두 배 이상 수준인 GDP의 2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실현가능한 단계적인 재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미흡한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확충까지 고려하면 재원조달의 한계에 봉착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결여돼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재정악화가 발등의 불인 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독거 노인들이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기관이 이들에게 전화나 방문을 해 안부를 확인하고 보살펴주는 사업이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1월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열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헌판식

유인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도 순차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체계 조정과 민간 보육시장의 불투명성도 개선돼야 한다. 효율적이고 누수 없는 복지전달체계의 확립도 당연히 필요하다.

복지시스템은 교육과 고용 그리고 분배구조를 포함한 경제 시스템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제도는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다. 복지 확충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조세와 보험료 인상은 경제 활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극대화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합의 없이 복지만의 일방적 확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공유지의 비극' 사례에서 보듯 이기심만 판치는 세상에서의 복지확대는 비능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부자의 돈을 재분배해서 복지한다는 의식이 아닌 우리나라 전통의 환난상휼, 상부상조가 복지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복지 없는 성장은 공허하고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성장과 복지는 취사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이뤄나가야 할 정책목표다. 성장과 복지가 상호 견인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금융기구 지원조직을 정부 내 상설화해야

IMF 상임이사를 맡은 2년 동안 필자는 한국의 쿼터량을 1.8% 수준까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IMF 내에 한국인 직원 비중을 늘리는 일에도 힘썼다. 이 사실 내 한국인 비중을 호주와 대등하게 높이고 실무조직 내 한국인 수도 늘렸다. 국제기구의 인적 구성은 국력의 또 다른 잣대일 수 있다.

이희수

기획재정부 소속
hlee1453@daum.net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하고 2008년 11월부터 2년간 IMF 상임이사를 맡았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IMF 상임이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제안하는 것으로 기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MF 상임이사는 우리 그룹(Constituency)의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한국 대표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사회 안건은 전원 합의 결정(Consensus Based Decision)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 1인의 영향력이 크다. 의견이 상충돼 불가피하게 쿼터량에 의거한 의사결정(Quota Based Decision)을 해야 할 때는 우리 그룹의 쿼터량 합계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 그룹(Constituency) 내에서도 금융위기 여파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국가가 나왔다. 몽골이 첫 번째 사례로서, 2009년 1월 구제금융 협상이 이뤄졌을 때 직접 참여해 과도한 정책간섭이 되지 않도록 지원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섬나라인 세이셸,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솔로몬 아일랜드 및 사모아에 위기가 발생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데 힘썼다.

우리 그룹(Constituency) 대표로서 이익 대변에 앞장서

우리 그룹 내 다수를 점하는 남태평양 도서국가군(Pacific Island Countries)의 경우 민족과 언어는 다소 다르지만 경제적 입장은 비슷하다. 이들을 위해 IMF 아시아·태평양국 내 전문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고,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현지사무소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개선했다. 이 지역의 신생국 투발루가 IMF 가입신청을 했을 때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쿼터 수준 등이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상임이사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한국 대표로서도 활동하게 된다.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안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소개한다.

먼저, 한국의 쿼터량(quota·지분율)을 1.8% 수준까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 처음 쿼터조정제도가 이사회에서 상정됐을 때 일부 이사들은 한국을 신흥시장국으로 분류하는 데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쿼터개혁의 핵심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의 지분이동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쿼터가 감소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유사한 입장에 있는 동료이사 규합, 주요 주주인 미국, 일본 및 독일이사 면담, 집행부 및 실무담당자의 설득을 통해 초기 논의 흐름을 점차 바꿀 수 있었다.

아울러, IMF 내 한국인 직원 비중을 높이려 했다. 이사회 논의 시 한국인 직원 수가 쿼터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실 내 한국인 비중을 호주와 대등하게 높였고, 실무국 내 한국인 수도 담당국장 면담 등을 통해 확충했다. 국제기구의 인적구성은 국력의 또 다른 잣대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시작한 국제기구 취업박람회(Job Fair)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IMF 총재가 한국을 네 번 방문했다. G20 정상회의의 유치가 크게 작용했지만, 한국에 대한 총재의 관심과 열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생각한다. 2010년 7월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 컨퍼런스가 주요 사례다. IMF 주관의 대단위 지역행사를 일본과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개최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잘 보여준다.

끝으로, G20 정상회의 업무 중 한국이 주도한 주요 의제(Korea Initiative)가 이사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지원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설치와 관련해 주제발언, 선도발언, 보충설명 등을 통해 동료이사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했다. 지속성장을 위한 상호평가절차(MAP) 구축, 쿼터개혁, 총재선출방식 개선 등 한국의 관심업무도 원활한 이사회 협의가 이뤄지도록 힘썼다. 한국이 의장국이었던 新 차입협정(NAB) 논의도 계획대로 진행돼 유사시 IMF 자원부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켰다.

상임이사직을 맡아 일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를 마쳐야 할 때가 됐다. 그동안 업무를 도와준 크리스 레그(Chris Legg) 대리이사, 사이먼 더건(Simon Duggan) 선임보좌관 등 13명의 이사실 스태프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나석권 과장, 문지성 과장 등 한국인 스태프의 도움이 컸다. 여러 감회가 있지만 IMF 상임이사직을 마치며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 이를 통해 국제 금융

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IMF 이사국·G20 의장국 경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첫째, IMF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전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스트로스 칸 총재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IMF가 본의 아니게 한국 국민들을 힘들게 한 점이 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번 위기극복 과정에서 보듯이 IMF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막중하다. IMF를 비난하며 멀리하기보다는 우리 품에 끼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IMF 이사국과 G20 의장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수년간 계속해도 확보할 수 없는 많은 정보와 지식, 인맥을 얻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사회에서 특정 이사가 발언을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



지난해 12월 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가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IMF, 세계은행(IBRD), OEC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7개의 국제금융기구 실무자 23명이 참석했다.

당국의 정치 및 경제상황, 문화적 배경, 인접국가와의 관계, 과거 발언경향 및 주장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정부 내에 국제금융기구를 지원하는 조직을 상설화해 각종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우리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호주는 IMF 주요 의제에 대해 재무성 및 중앙은행이 각각 지속적으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축적하면서 분명한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IMF 이사국 또는 G20 의장국이 아니더라도 평화원 자격으로서 우리가 기여할 부분은 많다. G20 의장국을 마친 후에도 국제금융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브라질, 영국 등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인재 양성에 필요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국제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체계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국제정치 및 안보 중심기구인 UN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경제 분야인 IMF, IBRD, ADB 등에서 수장을 배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뜻과 꿈이 있다면 길은 반드시 있다고 본다.

다섯째,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쿼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쿼터수준은 우리 국력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지표이다.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역시 쿼터 수준과 연계

돼 있다.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2% 이상의 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2010년 말 쿼터개혁 시 스페인(유럽의 무상 이전으로 2% 확보 성공)과 사우디아라비아(미국의 무상 이전으로 2% 유지 성공)가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2%에 턱걸이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쿼터 계산공식을 2013년까지 새로 만들고, 차기 쿼터 조정을 2014년까지 완료한다는 일정표가 제시돼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도 지금부터 전략적인 시각으로 대응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끝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Constituency 개편을 통해 독자 이사직을 영구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필자 주: 현재는 호주와 양분 체제로 2년마다 번갈아 이사직 수입). 한 Constituency 내에 두 개의 G20 국가가 있는 경우는 우리 그룹이 유일하다. 최근 우리와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한 우즈베키스탄이 우리 그룹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은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유럽 이사 수를 두 명 축소해 신흥시장국에 부여하기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목표년도인 2012년에는 전 세계적인 Constituency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경쟁해 나갈 것인지 통찰과 안목을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FTA 이해와 활용



저자: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구 FTA국내대책본부)
출판사: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정가: 12,000원 · 328쪽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FTA 활용 사례 총정리!

국토 면적이 전 세계의 0.1%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 편입한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 규모의 61%에 이른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FTA허브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서두르고, 우리를 추격하는 모양새에서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FTA는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동력이자 기업에겐 수출증대의 기회로, 국민에겐 질 좋고 값싼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FTA는 국민과 기업들에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됐다.

이 책은 FTA추진전략 수립부터 발효 후까지 산업 분야별 영향력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수록했다. 또한 기업들의 수출입 활용 실무를 소개하는 한편, 성공 사례들을 통해 현장에 서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총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문의: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02-2150-5716

원자력발전에서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2009년 말 UAE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를 최초로 수출한다는 소식이 모두들 설레고 기뻐했다. 그것도 한국형 원전개발의 바탕이 됐던 프랑스를 상대로 따낸 수주였으니 그 감동은 배가됐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약 한 달 동안 충격적인 패배소식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는 UAE 원전수출에 우리나라의 100억 달러 규모 수출금융 지원이 이면계약이었다는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의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간시설의 건설에서 소요 재원의 조달은 항상 큰 장애로 등장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안보 및 저탄소 녹색에너지원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신규 원전 건설은 복잡적이고 긴 건설기간을 필요로 해 재원 마련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세계적으로 원전의 건설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향후 약 20년간 약 300여기의 신규 원전시장에서 이들 국가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며, 승리자는 기술적 요인보다 재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를 감안해 원전을 자국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약 60여개 원전 운영국 및 신규 진입후보국 각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규 원전건설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세계은행 및 각 지역별 개발은행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OECD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는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해 신규 원전의 재원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분담하는 방안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회원국들과 활발한 정책토론을 벌이고 있다.

원전건설에서는 자금의 조달비용이 가장 중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발전원가(levelised electricity generating costs)를 비교하는데, 발전원가는 건설비를 포함한 투자비, 운영유지비 및 연료비를 고려해 계산한다. 여기엔 수명 후 발전소 해체비용, 사용후 연료 처리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분비용 등도 포함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건설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만 안정적이고 싼 연료비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 발전원가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월등히 유리하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자본 조달비용은 잠재투자자의 위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 원전건설 부지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제 환경, 국가에너지정책 및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1970~1980년대 원전의 대규모 확장시기 동안 다수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프로그램은 공기지연과 예산초과를 경험했다. 이는 인허가·법률상의 문제에서 기술 장애까지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했다.

건설과정(공기지연과 예산초과 등) 및 운전과정(장비 고장, 예상치 못한 운전중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자본 조달비용과 원전기술의 복잡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제

공하며, 원전건설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거나 대출을 갚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사회 여건에 따라 원자력사업 자체에 대한 논란이 추가적인 정치, 규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고정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자력은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규제가 완화된 전력시장의 가격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도 있다. 이러한 내·외부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투자자에

게 확산을 주기 위해서는 원전의 높은 이용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요인의 대부분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경감되고 다른 측에 이전되거나 공유될 수 있지만, 여전히 전력회사와 투자자에게 위험요인은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개입과 지원은 원자력 프로그램의 새로운 착수나 확대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에 틀림없다. 원자력이 장기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종합적 국가 에너지전략의 일부로서 에너지공급에의 원자력 기여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정비용 비율이 높은 설비는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데, 이러한 전력시장의 위험요소는 거대고객 혹은 전기공급자와의 장기 합의를 통해 경감될 수 있으며 거대소비자의 직접 참여는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한다.

원자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탄소거래 계획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비용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석유, 가스 등 경쟁자들의 비용을 올려 원자력에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미래 탄소가격의



지난해 4월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5회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렸다. 국내외 원자력계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해 향후 지속적인 원자력 수출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전시 부스에서 원자로 발전 설비를 살펴보는 관람객들의 모습

불확실성, 장기 방침에 대한 정치적 변동 가능성은 원전 투자자들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원자력 투자 장려정책의 핵심이다.

투자자에게는 원자력 프로그램의 건설단계가 가장 위험하다. 특히 최초 원전모델(First-of-a-kind)과 신규 원자력 프로그램에서 더욱 그러하다. 원전이 가동될 때까지 수년간 수익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본의 큰 부분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건설단계의 위험은 규제된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됐으나 개방된 시장에서는 불가능해졌다.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위험분산 위한 정부개입은 불가결의 전제조건

위험의 경감과 분배는 기업금융의 전통적 방법과 새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요구한다. 대부분의 전력회사는 수직적 통합구조로 돼 있고 대형이며 재정이 튼실하므로 신규 원전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프랑스, 한국, 일본 등 원자력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나라들은 과도한 분산

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시장이 분산돼 있는 국가에서 원전건설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요구된다.

원전건설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다른 방법은 확정된 비용의 토크계약 또는 성과기반의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을 통해 투자자와 공급자 간 위험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급자는 이러한 위험부담에 제한된 역량만을 가지며, 추가적 유인수단 없이는 빚진 투자자 또한 이러한 위험을 수용하는 데 주저할 것이다. 현재의 표준적인 대부보증제도(Loan guarantee)로는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공기지연과 비용초과의 위험은 지분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며, 지분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을 이미 다른 곳에서 가동되고 있는 표준화된 원전설계를 통해 줄이고자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능한 전략이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혁신을 장려하지 않는 기준미달이 될 수도 있다. 보다 혁신적인 재원확보 방법은 핀란드의 'Olkiluoto-3 원자로'와 같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전기 소비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된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와 전력 생산업자를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유인책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기 국가전략 아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원전의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은 원전의 운영기간 동안에도 진행돼야 하며, 특히 다른 원전건설을 위한 재자의 재원확보는 기존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을 때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가동 중인 원전을 소유한 회사는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수익금을 원전의 재정지원을 위해 쓰인 대출을 갚는데 쓸 수 있다. 건설과정의 위험이 제거되면 수십 년간의 안정적 수익에 대한 기대로 원전은 연금처럼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준다. 결국 기업재무 측면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회사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확신 없이는 어느 누구도 원전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 시간 내에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원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첫째,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 안정적 저

탄소 배출 에너지 공급안보를 목적으로, 장기 국가에너지 전략의 일부로서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전력회사, 금융회사 및 다른 잠재적 투자자, 원자력 산업계와 함께 신규 원전을 위한 규제체제 구축에 초기부터 공동 참여해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해결에 큰 관심을 갖고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원전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제도, 원자력 보험 및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도 시행돼야 한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간 장기 합의를 장려해 원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출보증인이나 수출신용장과 같은 자본비용에 직접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력시장 규제가 원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기 계약은 원전 투자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여섯째, 탄소배출권 제한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원자력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침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일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야 한다.

자유전력시장에서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원전이 선택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원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전의 긴 건설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비용(contingencies)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전력 부문의 장기수급계획을 정부 주도로 진행시키고 원전의 투입계획도 결정돼 원전의 성공적 건설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게 됐다. 이러한 공신력은 새로운 원전건설의 재원 마련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원전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전개될 원전 수출시장의 확대에 민·관이 합심해 나아갈 때다. 나의경제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봉수
주OECD대표부 참사관
kbs@mest.go.kr

과대 평가된 인플레이션

'Greater expectations?', Economist, February 5th, 2011

인플레이션이 세계 도처에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있으며, 식료품이 전체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흥시장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5% 수준이며 브라질과 인도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6%와 10%에 근접해 있다. 심지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선진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유로존의 경우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해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서었다.

현재 글로벌 통화여건이 지나치게 완화된 상태라는 점이 우려할 만하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긴축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거나 그러할 의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의 조합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단계이긴 해도 중앙은행 당국자들이 지나치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중 물가상승률이 2008년에 기록했던 최고치에 도달한 곳은 없다. 최근 물가상승세는 곡물가격 급등을 초래한 러시아 작황 부진에서 영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에 이르기까지 일시적 요인들 때문으로, 장기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단기적 충격들을 무시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시적 물가압력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통해 실질적 물가압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조금 상승했을 뿐이며,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식품 및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될 것임을 뜻한다. 영국은 강도 높은 재정긴



지난해 12월 인도는 전반적인 식량가격이 18.32% 뛰어들며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국내 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인도는 파키스탄에 양파 수출 재개를 촉구했다.

축으로 소비자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이런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흥국들은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2008년 당시보다 훨씬 완화된 통화여건을 유지하면서 경기호황을 누리고 있어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될 위험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위험은 과장된 것이다. 일례로 중국의 임금 및 물가 상승은 중국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은 신흥국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을 가중시킨다. 선진국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신흥국 정책 당국자들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신흥시장으로 외국자본이 더 많이 유입돼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본통제를 통해 외자유입을 막으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단들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긴축을 통해 지출을 둔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자본통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그토록 초조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지금의 상황은 공포에 떨 만큼 그리 심각하지는 않다.

나라
경제

정리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글로벌 확장에 박차 가하는 한국 기업들

● 견조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2010년 4분기 GDP가 0.5% 성장하면서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1년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낙관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때마침 외신에서는 적극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다양한 한국 기업들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 확장전략을 펼치고 있는 한국거래소(KRX)가 큰 주목을 받았다. *닛케이신문*과 *Bloomberg*는 런던과 토론토 증권거래소가 합병에 합의했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NYSE 유로넥스트와 독일 증권거래소도 합병 계획을 밝히는 등 선진국 거래소들이 대담한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KRX가 증시 IT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수익구조를 다각화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2011년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증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환호하고 있다.

● 2월 15일 *Financial Times*(이하 FT) 역시 KRX의 해외 전략을 비중 있게 다뤘다. FT는 최근 선진국 거래소 합병 추세에 맞서 KRX가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신흥시장에서 현지 거래소를 구축하고 외국기업의 한국 상장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글로벌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KRX는 시카고상업거래소 등 해외 거래소와의 협력관계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해외 거래소와의 인수합병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FT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KRX는 해외 거래소와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전에 자체 상장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충성 없는 ‘자원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업체 다나페트롤리엄에 대

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데 이어, 올해는 광물자원공사의 호주 광산업체 인수전 참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 주요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다.

●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과 FT는 2월 15일자 기사에서 광물자원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35억달러 규모의 호주 화이트헤이븐 광산을 인수하기 위해 예비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WSJ는 한국 컨소시엄의 예비제안서 제출은 원자재 수입국들이 고품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 인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WSJ는 호주 규제당국이 외국 기업의 자원 투자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가 광산 인수에 뛰어들자 자원이 외국인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호주 정치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 미국과 중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전·자동차 구입이 증가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호조세에 관심을 보였다. 2월 16일 *닛케이신문*은 현대·기아차의 세계시장 판매대수가 전년비 24% 증가한 573만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판매대수 기준으로 미국의 포드사를 제치고 5위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닛케이신문*은 1월 24일자 기사에서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도요타를 추월해 판매실적 9위에 올랐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면서, 자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닛케이신문*은 한국이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면 일본 업체의 점유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니키경제

정리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안정적 물량 확보가 관건...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양화해야

- “전세가격 상승세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 “최근 전셋값 상승에는 기저효과 영향 커”
- “금융위기 이후 신규 분양물량 대폭 감소”...
“입주물량 감소 과대 포장돼”
- “전세가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우리 현실에서
부작용 커”

정의철: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세 대란’·‘전세난민’ 등 세입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풍자하는 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전월세는 특히 저소득 가구의 주된 주택점유 형태이기에 더 문제가 된다. 먼저 김선덕 박사께서 그동안의 전월세 동향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선덕: 1월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는 0.9%, 서울은 1.0% 올랐다. 2002년 이후 최고 상승치인데,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1년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1월 상승률을 연율로 따지면 약 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부산·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올랐다.

진현환: 이번 전셋값 상승은 예년과 좀 다르다. 전셋값은 보통 8~9월에 많이 오르는데 지난해는 8~9월에 안정돼 있다가 10~11월 오르고 12월은 소강상태를 보이다 다시 1월 들어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주택 기준 7%가 올랐다. 특히 김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예년과 달리 지방광역시의 상승 수준이 매우 높다. 서울은 6.4%로 수도권과 비슷한데 지방광역시는 9.2%다. 그동안 지방은 물가상승률 이내로 전셋값이 안정돼 있었는데, 특이한 상황이다.

정의철: 전셋값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

때_ 2011년 2월 16일 오후 5시 30분

곳_ 건국대 세미나실

진행자_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참석자_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고 보나?

김선덕: 연초부터 크게 올랐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저효과(base effect)가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다. 보통 경제에서 기저효과는 전년 동기 대비로 파악하지만, 전세는 2년 계약이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09년 1~2월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셋값이 가장 낮았던 시기다. 그때 계약했던 사람들이 지금 재계약 시점에 있다. 그 기저효과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으로 약 12~13%가 넘고 서울 아파트 기준은 19.4%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의철: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나?

김선덕: 전반적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인허가 사항이 크게 줄었고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신규 분양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재개발 사업장도 철거는 진행됐지만 분양은 하지 못했다. 헐어 놓고 착공 못한 사업장이 서울에만 1만6천 개 정도다.

진현환: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공급(입주) 물량과 관련해서 조금 다르게 본다. 주택시장의 재고량과 신규 물량이 모두 충분히 매매시장과 임차시장이 다 안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택재고수라든지 연간 공급물량을 감안할 때 매매시장이 안정되면 임차시장은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

다. 지난해는 특히 매매시장이 많이 위축됐는데, 그것이 상당부분 전세 재계약이나 전세 대기수요로 남았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다. 주택 공급물량을 얘기할 때 민간 정보업체들은 아파트만 얘기한다. 아파트를 포함해 연립, 다세대, 원룸 등을 다 포함해 보면 입주물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 입주물량 감소 문제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정의철: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저금리 추세가 전세시장에 끼친 영향은 어떻게 보나?

진현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길 원하고, 이는 순수 전세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보증부 월세, 반전세 등을 제외한 순수 전세로 산정하기에 그 오름세가 더 커진 것이다.

정의철: 보증자리주택 때문에 매매에 대한 대기수요가 늘고 이것이 임대수요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있다.

진현환: 보증자리주택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도 모두들 인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입지가 좋은 곳에 주변 시세의 최대 반값에 공급되다 보니 보증자리주택에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다. 1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면 70% 정도는 장애인·국가유공자·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이다. 청약저축 가입 대상자들도 무주택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가입한 경우로 그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도 올해부터는 소득요건을 적용해 일정소득이 넘으면 청약이 안 된다. 정부는 보증자리주택 공급의 기본취지는 유지하면서 공급상 나타나는 부작용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의철: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다. 그럼, 앞으로의 전셋값 동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김선덕: 기저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올 봄뿐 아니라 상반기 내에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상승률은 하반기 들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하반기



정의철 교수

“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공급하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

기엔 입주량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전세 가격 상승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정의철: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1월에 이어 지난 11일에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임대사업 규제완화가 눈에 띈다.

진현환: 소득이나 자금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가야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늘려주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취지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이자를 낮추고 임대주택 입주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봄이나 상반기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사업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입주는 최소 2~3년 후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다주택자다. 보유기간, 구입면적과 같은 제한을 풀어 이들이 임대사업자가 돼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고, 자연히 임대 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의철: 사실 우리나라 공공 임대주택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정부가 재원을 들여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전세주택 공급을 좀 더 끌어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즘 또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다. 앞으로 월세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과 지금은 수급불균형이 문제인 만큼 월세시장으로 가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김선덕: 장기적으로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겠지만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논리로만 보면 월세가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 중에서는 목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에 응하는 수요자가 있는 한 전세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갖는 순기능이다. 한국의 주택 수요자들은 월세, 보증부 월세로 시작해 전세를 거쳐 매매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을 가지고 집을 산다. 따라서 웬만큼 집값이 하락해도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세를 늘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중은 줄겠지만 계속 남아 있을 것 이란 얘기다.

진현환: 임차시장에 구조변화가 오느냐, 이미 왔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기본적으로 전세제도는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와 어느 정도의 고금리하에서 관행화된 것이다. 집값 안정이 장기화되고 여기에 저금리 추세가 지속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서서히 월세로 갈 것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선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해도 문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문제다. 전세가 집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만큼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은 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가져와 그들이 평생 임차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의철: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도 월세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전세라고 하는 게 레버리지(leverage)여서 그걸 끼고 집을 사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돈을 빌릴 수



김선덕 소장

“ 임대산업 육성 쪽으로 정책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 주택을 민간이든 공공이든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주택이 소유보다는 거주 목적의 수단이라는 시각이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다. ”



진현환 과장

“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나 가구구조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의식구조 변화 등을 종합한 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빠르면 7월경 계획을 발표하려 한다. ”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월세로 갈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결과는 아니었다. 또 전세가 가지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번엔 단기대책과 관련해 많이 이야기되는 전세가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논의해 보자.

김선덕: 우리는 서유럽이나 미국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주택제도도 상이한데 그런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규제에 나서면 그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두 배로 오를 것이다. 계약갱신권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과거에도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폭증했다.

진현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 20%에 달하다 보니 임차시장에서 민간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4%다. 민간의 힘이 클 수밖에 없다. 전세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줄일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도 결국 4년 동안 전셋값을 못 올린다고 집주인들은 생각할 테고,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격을 대폭 올리게 된다. 전셋값이 오히려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필요한 곳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양질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문제를 풀어야지 직접적 가격규제나 집주인의 재산권을 억제하는 것은 전세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의철: 미국에서 임대료 규제가 있는 임대주택의 배분 결과를 조사해 보니 뉴욕의 경우 20% 정도 임대주택 미스매치(mismatch)가 생긴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다. 임대료가 싸 큰 평수에 혼자 살거나 또는 임대 수요자가 못 들어오는 미스매치가 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봐도 상한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장기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공급하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임대

주택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

김선덕: 동의한다. 특히 임대산업 육성 쪽으로 정책 방향을 대폭 전환해야 한다. 현행 분양제도는 법인에게만 분양을 못하게 돼 있어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수 없다.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 주택을 민간이든 공공이든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주택이 소유보다는 거주 목적의 수단이라는 시각이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리를 신중히 구성해야 한다.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인데 그걸 누구한테 판다는 것이냐’라고 오해하면 큰일이다.

진현환: 말씀처럼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형이라든지 법인형태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이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시기는 지났다. 소규모로, 얼마만큼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건설업체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거버넌스(민간 협치)도 재정비해야 된다. 이미 정부는 인구나 가구구조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의식구조 변화 등을 종합한 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빠르면 올 7월경 계획을 대외 발표하려 한다.

정의철: 지금까지 최근의 전월세 시장 동향부터 시작해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또 장단기 대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세심하게 짚어봤다. 우리의 논의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라경제

정리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 식사는 하셨습니까?” ”

새 학기 3월이다. 일반 회사나 정부부처에선 인사이동철에 비슷한 걸 느끼지 모르겠으나 학교 주변의 사람들에게겐 이즈음이 첫 만남의 설렘과 긴장이 팽팽한 시절이다. 새롭게 만나는

친구와는 어떻게 말문을 터야 할지, 이번에 맡은 클래스의 구성원 조합은 또 어떨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때 서로 좋을지, 이런 각자의 생각들로 새 학기 학교와 캠퍼스 공기의 밀도는 상당히 높아진다.

내가 아는 한 수사학 전공 선생님은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셨다. 나라를 떠나 맞는 새 학교 새 학기의 긴장은 한층 더 높았을 터. 잘 적응하고 싶었고 학우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나름 친근하고 푸근한 인사를 하겠다 생각으로 우리식 인사말을 독일어로 직역해 마구 날렸다.

“밥은 먹었니?”

학기가 지나 입이 좀 터지면서는 나오는 답변에 따라 후속 질문도 연달아 날렸다.

“뭐 먹었니?” 혹은 “누구랑 먹었니?”

그런데 어느 날 분위기가 이상했다.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대체 년 왜 우리가 밥은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누구랑 먹었는지가 궁금하냐고, 도대체 왜 그런 사적인 걸 물어대냐고. 한 한국인 유학생의 호의와 친밀의욕이 그들에게는 사생활을 침해 혹은 엿보려는 이상한 취미로 비춰진 것이었다. 꼭 같은 경험이 같은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어서, 나름의 보릿고개가 없었을 리 없으며 참혹한 전쟁의 피해로 메마른 기아를 경험했었을 것으로되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어느 곳에서는 무례가 될 수 있음을 그는 알았어야 했다.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는 잡음(noise)에는 물리적 잡

음, 심리적 잡음, 의미적 잡음이 있다. 물리적 잡음은 공사장 소음 등 실제의 잡음이며, 심리적 잡음이란 선입견·편견 등 화자의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고, 의미적 잡음은 메시지 송수신을 방해하는 사회문화적 차이를 말한다. 언어의 다름으로 우리가 독일어를, 독일인이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게 의미적 잡음의 극단적 예라면, 독일어로 바꾼 ‘밥은 먹었니’를 그들이 알아는 들었으나 그 안에 담긴 호의의 인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한 걸 묻는 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전형적인 의미적 잡음이라 하겠다.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셨을 것이다. 내 의도가 의미적 잡음이 낀 채 상대방에게 가 닿지 않고 투명하게 닿을 수 있으려면 내 위주의 사고가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언어화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누군가 혹 그 문화적 다름을 모른 채 호의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의 문화권에서는 그리 하나 보다’ 여겨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는 것.

수사학을 공부해보겠다고 먼 타국 땅에서 유학을 시작하다 반수사학적 언사로 초반부터 어려움에 봉착했던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짐 싸서 돌아오진 않은 걸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오해는 풀렸던 것이라. 진지한 문제 제기가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발전했던 것일까. 요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사업상 어느 나라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사되고 어느 문화권 사람에게 이런 인사는 금물이라는 등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 강의들이 많은 듯하다. 꼭 계약이 성사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선 이들과 나와 의 다름을 견주어 보고 상대를 배려해 말 건네는 습관을 들이고 혹 그것이 부족한 사람의 말 건넌을 더 그렇게 이해하려 든다면 그건 내 인격을 버는 것이 될 것이다. 나라
경제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
jayoo7@sun.ac.kr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9시 뉴스', '열린 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1997년 퇴사 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KBS 1라디오 '명사초대석' 과 국회방송 '원로에게 듣는다'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정아의 클래식 에세이, 마주침」,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 등이 있다.

- 
- 44 **마이스터高를 취업명품학교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46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
2011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 50 **농협 계약재배 늘려 채소값 폭등 막는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53 **2018년 세계 로봇강국 실현한다**
'서비스로봇산업 발전전략' 수립
지식경제부
- 56 **인터넷·모바일광고시장
스마트 IT경제 이끈다**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방송통신위원회
- 58 **인터넷 상거래 보호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마이스터高를 취업명품학교로!

학업 ·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정부는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학업 ·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지난 1월 수립했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간 산

업발전의 기틀을 담당했던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호함에 따라(2009년 4월 1일 기준 취업률 19.2%)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도입

이번 방안은 현 정부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terminal education)보다는 직업준비교육의 성격이 강했으며,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배우는 교육이라는 부정적 이미지(stigma)가 있었다. 때문에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신뢰 회복이 시급했고, 취업명품학교인 마이스터고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취업지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 진학하도록 할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지난해 3월 개교한 21개의 마이스터고의 성공에 힘입어 발표된 이번 대책은 마이스터고에서 시도된 각종 산학협력 방안들을 특성화고(필자 주: 2010년 6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의 전문계고는 일부 마이스터고를 제외하고 모두 특성화고로 바뀜)에 확산하고, 691개의 전문계고를 350개의 특성화고와 50개의 마이스터고로 정예화하는 등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취업명품학교 또는 취업중심학교로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 학교를 산업맞춤형 또는 산학협력기반형으로 바꾸는 노력 외에도 선진국처럼 산업계가 중등단계 인력의 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마이스

〈표〉 핵심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그 의미

방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21개 마이스터고 개교(2010.3)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고용전략회의(2010.5.12)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 방안 국민경제대책회의(2010.9.16)	학업 · 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1.1.19)
의미	마이스터고라는 취업명품학교를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마이스터고의 성공을 다른 특성화고까지 확산하기 위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선진화 방안 제시 - 선취업 · 후진학체제 - 체제 개편 등	체제 개편과 선취업 · 후진학체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 특성화고 장학금 -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산업계가 인력양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선취업 · 후진학의 한 유형인 취업 · 학업 병행체제 활성화 도모

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을 수용해줘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 입학제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취업인턴제', '과정형 공인민간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취업계약 입학제도는 채용 협약이 늦어지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재학 중에 충분히 배울 수 없다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취업인턴제'도 유사하다. 시범 도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인력양성에 참여하는 문화와 관행이 형성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세액 공제와 산업기능요원 추천제 확대 등)를 제도화함으로써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하나는 '과정형(課程型) 공인민간자격제도'의 도입이다. 과정형 자격은 기존 자격제도의 특징인 '검정형(檢定型)'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과정형 공인민간자격제도는 학교교육과정과 자격을 일치시킴으로써 지식 습득을 넘어 특정 직업과 연결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 신설

취업과 학업의 병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취업지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사내대학과 계약학과는 '평생교육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업이 참여하는 고등교육으로서,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 진학하도록 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내대학 입학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에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돼 취업보다 대학 진학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진학 제도인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역시 거점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9개 대학 참여). 참고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서 3년



지난해 11월 15일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은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역량강화 교육 훈련'에 9개국 직업능력개발 담당자를 초청했다. 이들은 국내 유일의 여자 마이스터고인 서울 대학동 미림여자정보과학고를 방문, 학생들의 직업교육 현장을 참관했다.

간 근무하면 이 전형을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청년채용 시 1,500만원보다 500만원 인상된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병역미필자 채용기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병역제도 개선 역시 지속 추진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당초 2012년)의 한시적 연장을 검토하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예의 편입 자격도 개선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목표제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도입하고, 경영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기관의 '기능인재추천채용제'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금의 사내대학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동업자 대학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정부만이 아닌 민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만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가 공동으로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만들어 산업계 주도 직업교육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나의 경제



김환식
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장
formycareer@naver.com



행정안전부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

2011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중계동에 사는 행정안전부 정철 주무관은 월요일과 화요일 출근길이 즐겁다. 이번 달부터 두 요일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대신 집 근처의 ‘도봉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하기 때문이다. 광화문 청사보다 쾌적하고 독립된 업무공간에서 일할 수 있고,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틈틈이 상사에게 대면보고도 가능하다. 한 시간 반씩 걸리던 출근을 자전거로 10분이면 도착하니 퇴근 후 7살, 4살 딸들과 중랑천을 산책할 여유가 생겼다. 정부가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범 구축한 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 덕분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ICT 기반의 복합사무공간으로, 도심의 본사 사무실과 동일한 사무환경을 제공해 업무몰입도 유지 및 복무관리가 용이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오래 일하면서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인 나라에 머물러 있다. 또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시간·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도록

스마트워크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근무체제다. 모두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해 일하는 일반적 근무패턴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며 일한다.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근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모바일 이동근무, 자택 인근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이 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 정해진 일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일할 필요가 없이, 기관별 특성, 개인별 사정, 업무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자유롭고 유연하게 일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구성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먼저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후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 아래 2015년까지 30%의 공무원이 스마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도봉과 분당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해 10개 시범기관(공공 8, 민간 2) 직원을 대상으로 체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2월 현재 약 700여명이 체험근무를 했고,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4%가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의 세부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2011년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이 계획은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확대,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조직실-인사실이 TF를 구성해 업무절차 및 방식, 조직문화, 인사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공동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전국 총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 '도봉 스마트워크센터' 개소식 모습

한다. 도입기인 2010~2011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개의 센터를 구축·운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지방에 확산할 예정이다.

확산기인 2012~2013년에는 수도권 25개, 지방 주요 거점에 5개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스마트워크가 활성화 되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병행해 중앙청사·여의도 등지에 대규모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낭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2014~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50개(누적)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일정공간을 스마트워크센터로 구축하는 방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전국 총 50개의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도입기인 2010~2011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10개의 센터를 구축·운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지방에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부문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 공인 스마트워크센터로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크 촉진법’ 제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을 보면, 스마트워크 계획 수립, 추진체계 마련, 센터 인증, 민간 기업 인센티브 제공, 스마트워크 기술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워크 촉진법’을 제정해 전 국가적 스마트워크 활성화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49①」에 따라 지자체장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표준조례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인사제도도 개선할 생각이다. 스마트워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성과평가지침'을 개정하고, 스마트워크를 공무원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 스마트워크 신청 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고, 기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침'을 개정할 것이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스마트워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필수교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지역별·기관별 순회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특히 관행적인 대면 중심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공무원에게 스마트워크 체험 근무 기회를 부여하며, 올 상반기 중 스마트워크 체험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등 스마트워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마트워크를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이제 시작단계다. 그러나 세계 1위 전자정부를 비롯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갖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스마트워크가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더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정부'가 멀지 않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미래정보화과장
boram@korea.kr

● MINI INTERVIEW

“보안·근태 문제 걱정 없어요”

김민혜 도봉 스마트워크센터 매니저

지난해 11월 개소 이후 시범운영 3개월째다.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

일정하지 않다. 신청을 해봤다가도 업무 때문에 못 오는 분도 많다. 총 24석이 마련돼 있는데, 20석은 공무원, 4석은 일반인을 위해 준비돼 있다.

그럼 공무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

현재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 공무원만 가능하다. 업무가 가능한 전자시스템과 연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인 좌석은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만 개방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떤가?

우선 편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 만족하고, 집과

가까워 출퇴근시간이 줄어든 것을 좋아한다. 현재 스마트워크센터가 도봉과 분당 두 군데뿐이라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을 가장 아쉬워한다.

보안문제나 근태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센터에 방문한 사람은 손혈관 인식기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입퇴실 시 본인이어야만 확인이 되는 것이다. 해당 부처 업무사이트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며, PC는 재부팅되면 기존 자료가 모두 삭제된다. 일반 USB는 사용할 수 없다. 자료를 빼는 건 가능하지만 넣을 수 없게 돼 있어 보안이 너무 까다롭다는 사람도 있다. 근무관리가 잘될까 걱정하시는데, 업무 중 메시지에 접속해 있어야 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안다.



(위) 도봉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아래) 센터 내부

일하는 방식, 이렇게 달라진다!

일반사무실 근무(Before)

스마트오피스 근무(After)





농협 계약재배 늘려

채소값 폭등 막는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을 찾은 한 시민이 아채코너에서 급등한 채소 가격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유통수(流通如水). 유통은 물 흐름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농가를 떠난 농산물이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물 흐름과 같이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람직한 유통정책은 상물(商物)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고,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단계 축소가 관건

지난해 여름의 배추사태로 인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량의 근본적인 부족 이외에 복잡한 유통경로와 배추 생산량의 80% 이상을 산지유통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가? 생산농가, 소비자를 포함한 유통주체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유통구조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제값에 농산물을 시장에 팔려는 생산농가,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일면 상충되는 욕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정부의 개입이 상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을 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통구조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무·배추 등 신선농산물의 특성에 주목했다. 이들은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이 높고, 쉽게 부패하고 저장성이 낮아 유통단계의 감모율(편집자 주: 줄어들거나 닳는 비율)이 높다. 배추의 경우 감모율이 판매가의 약 20%에 달한다. 또한 신선농산물은 생산 장소에서 바로 유통시킬 수 있는 공산품과 달리 산지 수집, 분산 과정이 필수적이다. 산지 생산, 수집, 분산이라는 기본 단계를 거쳐야만 상품이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상품화를 위한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친다.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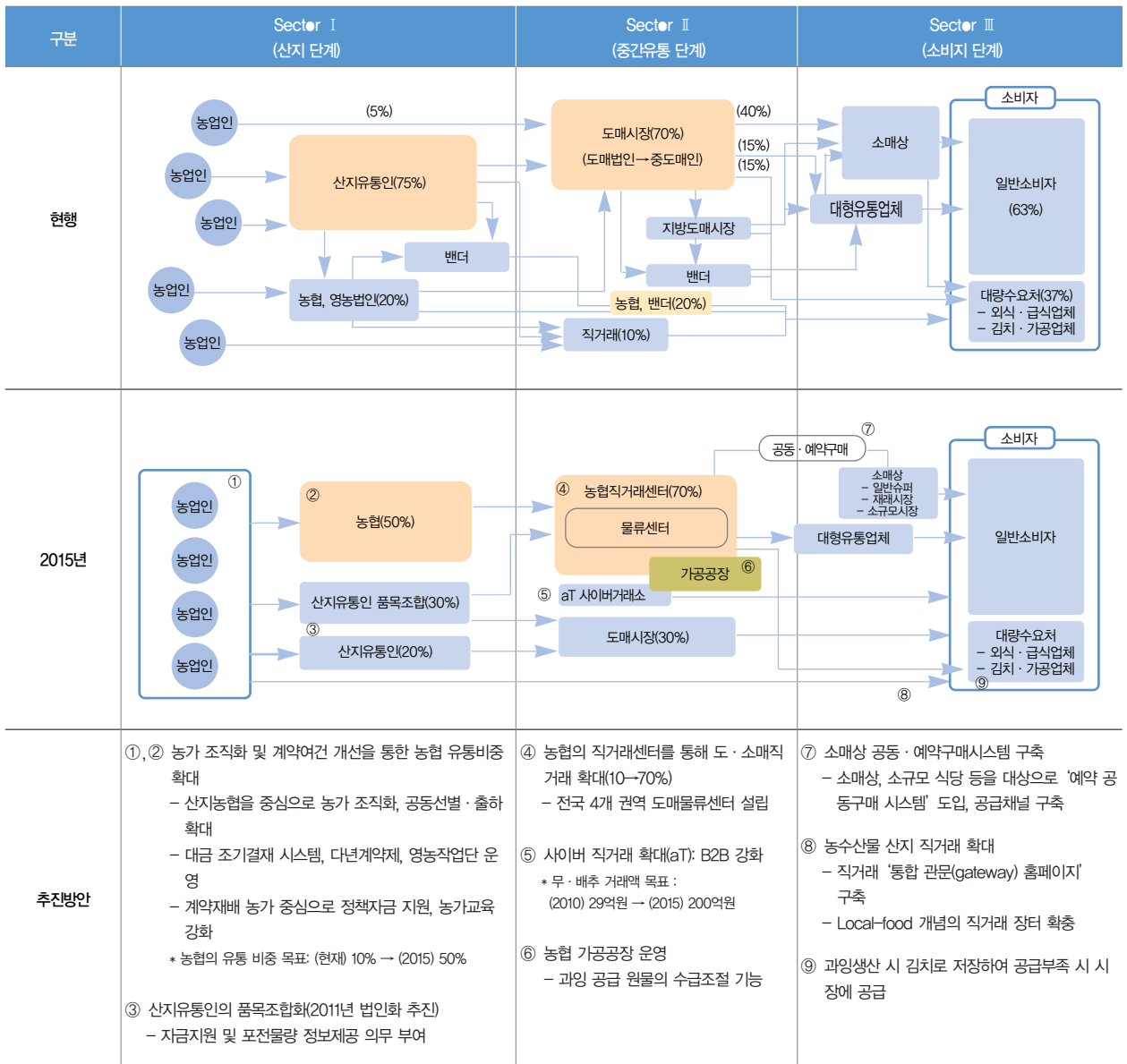
계의 축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소비지의 여건 변화를 고려했다. 대형유통업체, 급식·외식업체, 김치업체 등 대량 수요처의 급성장은 규격화·표준화된 농산물 공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1인 가족, 시니어층의 증가는 신선편이 농산물(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절단·다듬기 등의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말함)에 대한 수요 증대를 가져왔다. 이런 소비여건의 변화는 오래된

생산농가, 소품 위주의 생산구조와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강화에 착안했다. 농협이 소농 위주의 생산능력을 조직화하고, 농산물을 수집해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의 관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농협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유통구조가 제 모습을 갖추는 과정에서 지난해 배

〈표〉 농산물 유통의 미래상(예: 배추·무)



추파동과 같은 위기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대책 마련도 고려했다.

요약하자면 이번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목표를 유통단계 축소,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상응

한 유통구조 구축,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로 삼았다. 대책의 근간은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한 생산자 단체인 농협 역할 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와 수급안정이다. 즉, 농협 취급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단기적인 농산물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농협의 취급물량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올리는 15%까지,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직거래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해 유통비용도 점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농협은 직거래 물량 확대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 방식 개선, 영농작업단 구성 및 다년계약제 도입과 도매물류센터 설립 등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협과 계약을 맺은 농가는 생산에 집중하고, 농협은 농산물을 수집해 도매물류센터를 통해 대량구매처로 분산하는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작황 현황, 수요 전망을 고려한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까지 농협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이상기후에 대비해 시세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업관측을 내실화한다. 일시적인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공급량 확대를 위해 수입산 위주의 비축에서 국내산 비축 물량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지역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장터 확충

둘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행 경매 위주의 도매시장제도를 시장변화 추세에 맞도록 개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수의 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가격진폭을 줄이고, 경매 대기 시간

현재 8% 수준에 불과한 농협의 취급물량을 계약재배 등을 통해 올리는 15%까지,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직거래 시스템을 강화하고 현행 5~7단계의 유통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해 유통비용도 점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을 축소해 유통 효율성을 증대한다. 경매제도를 생략하고 직접 도매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의 확대 및 축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정산해주는 조식을 신설할 계획이다.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매시장에서 경매가격이 과열되는 경우 1일 상승률을 제한하는 가격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도별로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해당 지역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농업인 직거래 장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 정례 운영되는 장터를 도별로 1~2개소씩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한 장터를 모델로 삼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 직거래도 확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설치돼 있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B2B 거래를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수립하면서 유통 문제의 시작과 끝이 산지(產地)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생산농가가 변해야만 하고, 유통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발전과 유통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위기는 기회다. 다만, 그 기회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자에게 온다. 지난해 배추파동이 정부에게는 시련의 기간이었지만 국민들의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정부는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임정빈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imjbin@korea.kr

2018년 세계 로봇강국 실현한다

‘서비스로봇산업 발전전략’ 수립

로봇산업이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우리나라 차세대 1등 산업으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는 서비스로봇산업을 융합 신성장산업의 첨병, 수출 효자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서비스로봇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현재 선진국과 2.5년 정도 격차가 있는 핵심로봇 기술 수준을 2018년까지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09년 10% 수준에 불과한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을 2018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세계 로봇시장 1천억달러로 성장할 전망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약 94억달러이며, 이 중 서비스로봇은 전체 로봇시장의 약 1/3인 31억달러 규모다. 제조용 로봇에 비해 비중은 작지만 2003년 이후 연평균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로봇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G20 시장 등에서의 소득수준 향상, 웰빙 추구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서비스로봇 수요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2018년 전세계 로봇시장의 약 8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로봇시장 규모도 2018년까지 1천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듯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로봇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EU 등 선진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타임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영어교사로봇을 지난해 세계최고 발명품 50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주요 언론을 비롯한 세계 로봇산업계가 한국

정부는 서비스로봇산업을 융합 신성장산업의 첨병, 수출 효자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 12월 ‘서비스로봇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그간의 로봇산업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해 선제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술경쟁력 제고, 성장기반 확충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의 서비스로봇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제조용 로봇은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서비스로봇은 집중 육성 시 세계시장을 선점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비스로봇은 ‘기존 서비스 + 로봇’ 융합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 융합산업으로 부품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 등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크다.

그동안 정부는 시범사업, 전시회 등 다양한 시장창출 시도를 해왔다. 이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은 2009년 처음으로 약 1조원 시장 규모로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조건으로 실제 적용사례를 요구하고 있어 다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국내 로봇 운용 경험을 갖고 해외진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력은 미흡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2002년부터 약 7,500억원의 정부 R&D 투자를 통해 감시경계로봇의 알제리 수출 성사, 주요국과의 핵심 원천기술 격차 대폭 축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다. 선진국은 의료로봇 등 기존 제품에 새로운 첨단기술을 부가해 융합 신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아직 로봇청소기·교육용 로봇 외 뚜렷한 응용제품 개발이 미흡하다. 또한 구동기·센서·제어

기 등 로봇 핵심부품 분야에서 대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조기 국산화 지원도 시급하다.

기반구축 측면에서는 2008년 3월 세계 최초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고, 2009년 4월에 2013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는 마련했으나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로봇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개선, 관련 규정 신설 등 범정부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로봇 산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로봇활용 시범사업 추진

정부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급성장하는 서비스로봇산업을 G20 시대 세계시장을 향한 신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로봇산업 발전전략’에선 그 간의 로봇산업 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해 선제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기술경쟁력 제고, 성장기반 확충을 3대 방향으로 선정하고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총 300억원으로 상수관·소방 등 부처 주도형 사업과 자유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형 사업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이디어 발굴형 사업은 해외 현지 적합형 기술 확보, 초기 마케팅, 바이어 확보 등을 위해 국내 적용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전략 수출지역을 대상으로 한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한다.

둘째, 서비스로봇 기술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첨단로봇기술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을 조기 사업화하는 신개념 RT(Robot Technology) 융합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획에서부터 R&D, 시장검증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3년 내로 최대한 단축해 로봇 융합시장이 보다 빨리 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직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은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로봇 공통

〈표〉 부처 주도형 7대 분야 시범사업 개요

7대 분야 (소관부처, 주관기관)	주요 내용	2011년 예산(억원)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원)	초·중·고 100여개교에 로봇활용 수업 운영	50
상수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상수관망에 진단· 맵핑·갱생용 로봇 투입	25
소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기술원)	현장정찰로봇·화재진압로봇 화재현장 투입	25
중소제조 (지식경제부,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업에 도금· 주조공정개선 로봇 투입	50
국방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감시경계·지뢰탐지· 초견 로봇 등 투입	2012년부터 실시
의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재활, 식사보조, 기타의료 서비스로봇 투입	2012년부터 실시
농사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경지 자율이동로봇, 식물생산 공장 구축	2012년부터 실시
합 계		150

SoC(System on Chip) 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 로봇은 ‘다품종 소량생산’형 산업으로 하드웨어 플랫폼은 다양하나 로봇부품·알고리즘(Algorithm;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말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함에 있어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를 의미)은 기업별·제품별 공유가 가능해 각 기업들의 개발비용 절감과 기간단축이 기대된다.

〈그림〉 서비스로봇의 산업 간 연계성·융합성



마지막으로, 성장기반 확충 차원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로봇교실 지원, 로봇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대학 내 로봇연구센터 설치 지원, 로봇 특성화대학원 과정 확대 등 전 학계에 걸쳐 미래 로봇 인재양성 기반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범부처 로봇 시범 사업과 연계해 로봇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품질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우리 로봇산업계가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발

돋움하고, 서비스로봇이 수출·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봇산업 발전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엽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사무관
joongyeop@hanmail.net

이것이 궁금하다!

우리나라 로봇산업 어디까지 왔나?

에듀테인먼트로봇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영어교사 보조로봇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 21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 '잉키'(EngKey)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텔레프레전스형(telepresence, 아바타로봇) 기반의 자율형 영어교육용 로봇으로 실시간 얼굴인식, 동작모방기술, 비전(사람, 물체) 및 음성인식 기능의 기술을 갖고 있다. 원어민 교사가 현지에서 원격 접속을 통해 교실에 있는 로봇의 표정과 움직임, 시선, 동선 등을 조작하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교실에서는 로봇 머리에 부착된 LED 모니터 속 아바타를 통해 실시간으로 원어민 교사의 표정과 동작이 구현돼 학생들이 수업시간 동안 원어민 강사의

표정과 로봇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의료용 로봇

국내 의료용 수술로봇은 그동안 100%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복강경 수술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복강경 수술로봇은 절제부터 봉합까지 전작업의 프로그램화된 처리가 필요해 매우 어려운 기술을 요한다. 임상시험, 품목허가 취득 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사업화될 예정이다. 인공관절 수술로봇인 '로보닥'도 국산화가 거의 완료됐으며, 혈관 내 초소형 로봇을 삽입해 협전·협착 등 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마이크로 로봇(1mm, 10mm 사이즈) 시제품도 개발에 성공했다.

휴머노이드로봇

대한민국 간판 휴머노이드로봇인 KAIST의 '휴보'는 무게가 45kg으로 동급 휴머노이드 중 가장 가벼워 유연하고 빠른 상체운동, 달리기 등이 가능하며, 개량된 5개 손가락은 독립적으로 움직여 임의 형상의 물체를 집을 수 있다. 최근 미국 내 카네기멜론대, 미시간 공대 등 6개 대학, 싱가포르 국책연구기관인 I2R(Institute for Infocomm Research)에 각각 6대, 2대로 총 8대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수출 성사를 계기로 일본 아시모 등 선진국 휴머노이드 제품들과 본격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KIST 영어교사 보조로봇



복강경 수술로봇 시제품



휴머노이드로봇 '휴보'



인터넷 · 모바일광고시장, 스마트 IT경제 이끈다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지난해 3월 29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모바일광고시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모바일광고 정책 포럼'이 출범했다. 사진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바일광고 정책 포럼' 창립 총회 모습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은 2004년부터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 성장했다. 2010년 인터넷광고시장은 1조5,835억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약 2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주요 매체인 TV · 신문 · 잡지의 광고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히 급속한 성장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 인터넷광고시장은 2009년에 약 546억달러를 기록했고, 모바일광고시장은 2009년 약 74억달러(전년 대비 87% 성장)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영국에선 2009년 상반기에 인터넷광고가 1위 광고매체로 자리잡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엔 2011년 신문광고를 추월하고, 2020년 TV광고를 제치고 1위의 광고매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엔 인터넷광고가 TV광고 앞지를 것

인터넷광고는 배너광고에서 출발해 1999년 검색광고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이후 디스플레이광고 · 지능형 검색광고 ·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신유형 광고 등으로 영역이 확장, 진화되고 있다. 특히 2011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요 수익원으로서 모바일광고가 부상하고 있고, 위치기반 · 이용자행태 · SNS 등을 활용한 광고기법이 개발되면서 모바일광고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구글은 2009년 12월 모바일광고기업인 애드몹(AdMob)을 인수했고, 애플은 2010년 1월 애드몹의 경쟁

업체인 콰트로 와이어리스(Quatro Wireless)를 인수, 아이애드(Ad)라는 이름으로 진출할 것을 발표했다. 최근 부상한 페이스북 역시 2011년 모바일광고회사 'Rel8tion'을 인수하는 등 세계적으로 모바일광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바일광고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기존 광고시장과 차별화된 새로운 광고시장을 개척하면서 전체 광고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핵심 광고유형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애플 · 구글 ·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함께 인터넷광고시장이 모바일광고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시장 점유율 확보에 노력을

新인터넷·모바일광고시장을 개척하고 광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며 건전한 광고 이용기반을 조성하는 인터넷·모바일광고 3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켜 인터넷광고시장이 2014년까지 약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소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개발해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이애드, 애드몹 등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아 다각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모바일광고는 기존 광고와 달리 양방향성, 실시간성, 수용자선택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로운 광고비 산정방식이나 효과측정체계 및 객관적 통계자료 등이 불명확하다. 뿐만 아니라 불건전광고·부정클릭 등으로 인한 이용자 및 광고주의 피해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인터넷광고 및 시장의 유통환경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아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 마련 등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인터넷·모바일광고시장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10년 총 6차의 모바일광고 정책포럼 및 3차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2010년 10월 14일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액션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국내 인터넷·모바일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광고의 효과측정체계 등 법제도를 정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위해 자율적 정화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新인터넷·모바일광고시장을 개척하고, 광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하며 건전한 광고 이용기반을 조성하는 인터넷·모바일광고 3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유발 효과를 발생시켜 2014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내 ‘한국인터넷·모바일광고진흥협회’ 발족

먼저, 新인터넷·모바일광고시장 개척을 위해 신유형 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모바일광고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객관적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터넷·모바일광고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또 국내 광고플

랫폼 활용도 제고를 위해 ‘유망 인터넷·모바일광고 플랫폼 인증제 및 1만명 테스트패널’을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이용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모바일광고와 앱의 결합을 촉진

하기 위한 ‘스마트 애드&앱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지난 1월 27일 개최했으며, 향후 분기마다 마련해 관련 주체들 간 상호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터넷광고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마케팅협회, 인터넷광고심의기구 등 관련 협회·단체를 통합한 ‘한국인터넷·모바일광고진흥협회’(KIAA; Korea Internet/Mobile Advertising Association)를 올 상반기에 발족하고, 통합기구를 중심으로 효율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격·용어·거래표준 등 표준화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인터넷광고 이용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기구 KIAA를 중심으로 신유형 광고 가이드북 보급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부정클릭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 발전사를 살펴봐도 광고산업은 해당 미디어와 병행해 발전해 왔다. 인터넷·모바일광고 역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미래 핵심엔진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경이 없는 인터넷·모바일경제에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것임은 분명하고, 이에 대응해 국내 기업, 플랫폼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넷·모바일광고는 과거 저평가되던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연관 산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산·학·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인터넷광고를 매개로 한 인터넷산업 발전에 매진해야 할 때다. 



한정원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사무관
jwhan@kcc.go.kr



인터넷 상거래 보호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9년 우리나라의 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규모는 약 12조원이었다. 2003년 약 6조원에 비해 두 배 정도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하프플라자 사건(필자 주; 2003년 50%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소비자가 입금한 돈 약 300억원을 가로채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사건)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 및 구제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지난 3년 새 24%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4월 도입한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 즉 거래대금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것) 제도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 미배송, 연락두절, 허위 정보 게재 등 크고 작은 전자상거래 사기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거래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년 1월 28일 공포) 및 시행규칙(2011년 2월 10일 공포)을 개정해 전자상거래 구매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단행하는 제도개선의 내용은 두 가지다.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을 확대했고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의무화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1회 구매액 기준 10만원 이상 구매에만 적용되던 구매안전 서비스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구매안전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성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2009년 7월 수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옷을 만들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온 상인들과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쇼핑몰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살펴보는 모습

앞서 언급한 에스스로 외에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 상담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품 미배송 등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3,143건 중 5~10만원 금액의 상담건수가 630건으로 20.0%를 차지했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비중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의류/신발, 화장품, 잡화 등 소액 생활필수품의 거래량이 증가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소액구매의 주요 구매층인 학생, 서민 등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구매안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지 약 5년 만의 개정으로, 소액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해 구매안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거래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도 적용 및 현재 적용이 배제돼 있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도 적용 등 관련된 추가적 소비자보호 강화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정보 링크 의무화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터넷쇼핑몰에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사업자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접수되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전산으

기존의 1회 구매액 기준 10만원 이상 구매에만 적용되던 구매안전 서비스를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사업자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사기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현황

(단위: 건)

	연락두절	허위·도용 정보	민원처리 지연	계
2007년	1,518	1,076	165	2,759
2008년	1,058	1,302	166	2,526
2009년	1,291	1,917	219	3,427

자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2010

로 취합한 뒤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 허위정보 게재 등 사기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소비자가 사업자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신고된 사업자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안전 강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가 이월집에 따라 하반기 시행 예정(시행령 2011년 7월 29일, 시행규칙 2011년 8월 11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모든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해야 한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사업자 간담회,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자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 이용자인 소비자 홍보도 함께 실시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거래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홍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사무관
redot@ftc.go.kr



청년 일자리가 수직상승하는 그 날을 위해

지난해 7월 5일,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고 일자리 총괄부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 결실 중 하나인 '청년 내 일 만들기' (2010년 10월 발표)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만든 고용부 원년 프로젝트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왼쪽부터) 문진우 전문위원, 정해영 서기관 이민재 과장

매서운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나니 여느 해보다 기다림이 커져버린 봄의 문턱 앞에 서 있다. 굳이 겨울을 빗대지 않더라도 3월은 졸업과 입학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싱그러운 ‘청년’의 달이다. 그렇다면 5,500여명이 근무하는 과천청사에서 3월을 가장 빨리 체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13명이 그들이다.

3월을 가장 빨리 체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청년고용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춧돌이다. 각 부처가 고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시기에 고용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다. 주요 추진방향은 우선, 경제 성장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직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만들어 낼 것이다. 1차 대책은 청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추가적으로 7만1천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고용부를 포함한 12개 부, 특허청 등 3개 청, 금융위원회 등 16개 부처의 청년 일자리 실천 과제를 망라하는 프로젝트 지휘자가 청년고용기획과 이민재 과장이다. 완성도 높은 합창을 이끌어내려면 소리에 대한 집중력과 조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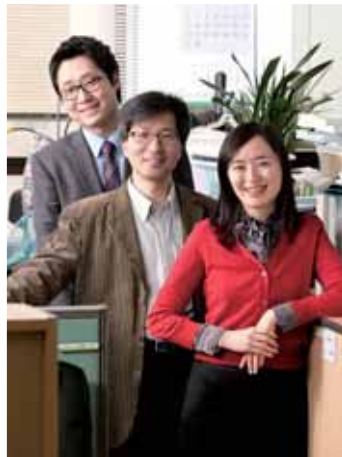
대한 헌신, 미세한 불협화음을 알아채고 튜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과장은 이 세 가지 자질을 갖추고 고용정책실과 노사정책실에서의 실무경험과 현장에서 똬 감각을 토대로 과의 중심을 잡고 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1차라는 단어에서 후속을 예상했으 터. 청년고용 주관부서인 청년고용기획과는 1차 프로젝트를 착실히 실천하면서 동시에 2차 프로젝트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터가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부 직업능력정책국, 교과부 등과 협력하면서 과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정해영 서기관이다. 국제 분야 전문인재로 통하는 정 서기관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청년 내 일 창출’을 위해 힘들지만 보람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프로젝트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각종 정책 통계를 발굴·정리하는 문진우 전문위원은 과원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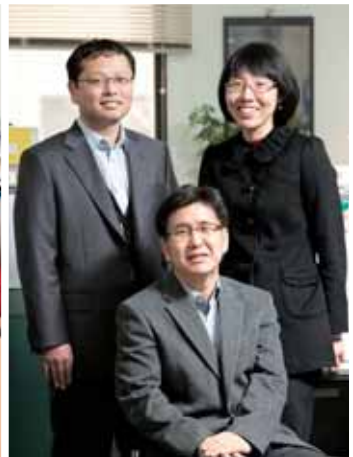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익숙해진 단어, ‘미스매치’(mismatch), ‘구인-구직 불일치’라는 이 난제를 해결할 주요 사업으로 고용부는 대졸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산업계(기업·사업주단체)가 주도하는 현장기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준비하고 첫발을 디뎠다. 이른바 ‘명품인재 양성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업은 일의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움에 풍류를 겸비한 김문실 사무관과 실무에 밝은 박형란 주무



(왼쪽부터) 김석기 주무관, 김문식 사무관, 박형란 주무관, 박정현 사무관



김준호 사무관, 배정대 주무관, 한진선 사무관



유효상 주무관, 윤옥균 사무관, 문세원 주무관

관이 함께 키를 잡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는 G20 세대. 그들을 위한 해외일자리 취업지원 사업도 있다. 최근 5년간 청년고용률이 40~43%에서 제자리걸음을 하자 국경을 넘는 글로벌 리더양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박정현 사무관 책상 위에 놓인 해외취업 자료는 술 한 손때로 인해 안으로 말리지 않은 종이가 없을 정도다. 평안한 미소로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는 김석기 주무관은 요즘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조사 갈무리 작업으로 바쁘다.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 신규채용 실적 반영될 예정이라 2010년 현황조사가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 수도 있겠다.

인턴제 시행 2년, 기업·청년 모두 '환영'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구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제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케 했다. 우리 정부도 2009년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통한 민간수요 창출에 전력했고 소속부처인 고용부는 청년일자리 지원방안으로 청년취업인턴제를 부활시켰다. 그 시작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인턴제는 취업에서 창업·창직 인턴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며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다.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정규사원 입직 통로로 인턴제를 이용하고 있고 청년은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눈높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첨병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놀

라운 성과를 이끈 드림팀은 미즈(Miz) 캔디 한진선 사무관, 출중한 부산 사나이 배정대 주무관이다. 또한 新청년 김준호 수습사무관이 창조캠퍼스 신규 사업을 맡아 대학생들과 함께 창직 아이디어에 반짝이는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무원은 정책을 통해 고객을 만나고 설득하지만 최종 고객인 청년에게 정책을 선보이기까지 예산 편성과 반영요구라는 만만찮은 고개를 넘어야 한다. 비록 각 사업 담당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지만, 실제 집행할 수 있기까지 그 과정에서 청년고용대책 사업을 총괄하는 조타수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순도 높은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지난 1년 간 청년고용기획과 주장 역할을 해온 윤옥균 사무관은 대학·고교 등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주무팀에는 취업지원관, 곧 시행될 대학 내 고용센터인 잡영플라자와 함께 과 살림까지 맡아 보이지 않는 수고로 하루가 짧은 유효상 주무관이 있다. 청년고용기획과라는 특성상 현장에서 청년들과 만나고 교감하는 자리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정책 알리미 문세원 주무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높이높이 뛰어오르는 토끼해를 맞아 청년고용기획과 13명 모두는 올 한 해 청년 일자리 수가 수직상승하는 즐거운 상상을 한다. 꿈이 손에 잡힐 그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같은 곳을 향해 노력하는 팀원들. 그들의 열정으로 사무실 전등은 오늘도 늦은 밤까지 쉬지 못하고 있다. 나의 경제

글 문세원 주무관



EU가 열렸다. 경제가 보인다.

「한·EU FTA」서명



개원 40주년 맞은 KDI 현오석 원장

“정부가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정책대안 제시할 것”



1950년 충북 청주생
서울대 경영학과,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1989~1991년 세계은행(World Bank) 이코노미스트
1996~1999년 재정경제부 예산심의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등
1999~2000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2000~2001년 재정경제부 세무대학장
2002~2008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2008년 3월~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2008~2009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2009년 3월~현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09년 3월~현재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2009년 3월~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6.1% 성장하면서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올해도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된 성장을 바탕으로 4.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요, 최근 국내외 경기 상황을 진단하신다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압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던 회복세가 정상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계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 금리인상 및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우려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 기초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경기위축 우려가 확산되는 등 악재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국가 간 정책공조의 어려움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한 국가 간 긴장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국가 별로 경제회복 속도가 달라 양적완화(미국), 재정건전화(유럽), 긴축(중국) 등 차별적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경제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외국 자본이 앞으로 더 중국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위안화 절상 문제로 미국 등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남북 군사회담 결렬에서 보듯 남북 긴장 국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은 어디에 뒀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서 말한 대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 성장의 내부여건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엔 금융위기 극복 등 도전과제가 다소 단순했지만, 올해는 인플레이션, 경제회복세 지속, 경제체질 개선, 가계 부채 축소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물가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의 내부여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유연성을 높여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산·서민층의 자생력을 살려야 합니다. 실물경기의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잠재력도 높이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역시 물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경기 회복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국내 물가도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비축 등 공급 측면의 대책을 수행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담합 등을 막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정책당국도 언급이 있었지만, 올해는 물가안정에 정책 역

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으면 체감효과가 떨어집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2011년 1월 현재)은 8.5%대로 OECD 국가들보다 낮지만 진학이나 징집 등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실업률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 사회 전체가 세대 간 일자리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를 더욱 고민할 때입니다. 특히 교육·의료와 같은 뉴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이에겐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대학과 대학 내 학과 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교육과정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교육을 접목하고, 벨기에가 시행하는 청년층 고용할당제도 검토할 만합니다.

올해 한미, 한·EU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지만, FTA의 기대효과가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저절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FTA가 체결됐지만 아직 기업의 상당수는 FTA 관련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아울러 국내 제도나 관행을 FTA 및 개방화 추세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 부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FTA 확대가 필수라는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의 하나입니다. 우선 고령사회에서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고 연금 급여를 낮추며 정년을 연장하는 등 경제 전체의 운용의 틀을 바꾸는



현오석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해 정년 후에도 노인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주정책의 변화도 심각하게 고려해볼 만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출신에 상관없이 우수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출산의 경우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 보장, 보육시설 확충, 단시간 근로 정착 등에 우리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 있을 때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서구 여러 나라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본적 시스템 개혁이 관건입니다. 미래 트렌드 변화를 국가발전의 기회요인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통합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 평화와 공영의 국제적 리더십 등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돼 후발국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한국경제가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들더라도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경제규모와 소득 수준은 꾸준히 높아질 것입니다.

KDI가 올해로 개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침 지난 2월 KDI가 세계 6,500여개 싱크탱크 중 75위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KDI가 전세계 6,480개 싱크탱크 중 75위[펜실베이니아대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조사에 선정된 것은 상위 1~2% 안에 드는 의미 있는 성과지만, 종합 1위를 차지한 미 브루킹스연구소를 비롯해 세계 초일류의 연구기관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KDI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경제가 건국 이래 60년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룬 과정에서 KDI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국내외 평가입니다. 그러나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지금, 진정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선 KDI의 역할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세월 한국경제의 성공은 한마디로 국민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합쳐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간 KDI는 한국경제 발전 과정의 한복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지금, KDI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KDI는 사회와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안함으로써 정부가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적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KDI를 배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몽골은 KDI와 유사한 조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우수한 싱크탱크들도 KDI의 변화된 역할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올해가 KDI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경제

대담 · 정리 나라경제 편집팀



마음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사랑을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번영을 향한 경제설계에서 선진경제로의 도약에 이르기까지

KDI가 개원 40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40대는 20~30대 화려한 성취와 온갖 좌절을 거쳐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과 같은 세대다. 지나온 생을 성찰하면서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때다. 그렇다면 문을 연 지 40년 된 KDI의 어제와 오늘은 어떨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뒷받침 위해 1971년 설립

KDI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1년 3월 설립됐다. 국민경제 여러 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다.

초기 KDI는 1970년대 한국경제의 도약기를 맞아 경제 개발과 직결되는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선도적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 연구의 기초를 쌓고 성장 로드맵을 그려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1980년대에는 광범위한 사회정책 분야의 기초통계 정비, 남북 경제협력의 단초 제공 등 연구방향을 보다 폭넓게 확장했다. 1990년대에는 거센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현안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골격과 구조조정의 핵심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 힘썼다.

2000년대 들어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경제 선진화를 위한 경제제도 개혁 및 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2월 현재 KDI는 본원과 4개의 부설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은 거시경제연구부, 금융경제연구부, 산업·국제경제연구부, 시장·제도연구부 및 재정·사회정책 연구부로 나뉜다. 거시경제연구부는 거시경제에 대한 기초 연구와 국내외 거시경제동향 및 현안분석, 경제전망,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금융경제연구부는 금융시장동향 분석 및 금융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국제경제연구부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경제 성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시장·제도연구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장 및 제도 관련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재정·사회정책 연구부는 국가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연구를 담당한다.

부설 경제정보센터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주)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흡수·통



KDI 본관 전경

합해 발족했다. 경제정보 제공, 정책홍보 및 경제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998년 3월 개원한 국제정책대학원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실무진의 재교육을 통해 국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협력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2005년 1월에는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지원센터를 흡수·통합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했다.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2009년 9월엔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설립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도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명실상부한 종합정책 연구기관의 모습이다.

이런 KDI에 일류급 우수인력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 올 2월 현재 총 2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세계 톱(Top) 수준의 박사 인력이 73명에 달한다. 석사급 연구원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연구행정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공정한 업적평가에 의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하는 연구에 집중

창립 40주년을 맞은 KDI의 2011년도 연구사업 목표는 성장잠재력 확충, 대내외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사회통합 제고, 국제경제 협력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연구 강화: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첫 번째 연구사업 목표로 삼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도출해 고용률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연구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대내외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대내외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선별적 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국내경제의 영향 및 대응: 금융시스템을 중심으로’, ‘경제 세계화와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역량’ 등



지난 1972년 7월 4일 KDI 본관 건물 개관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테이프를 끊고 있다.

을 중점 연구과제로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통합 제고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방안 연구: 양국화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복지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제고와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선정했다. 복지·노동·교육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배구조의 변화와 사회정책의 방향’을 중점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국제경제 협력 및 지역경제 통합 연구: 국제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국제경제 협력 및 지역경제 통합 연구(북한경제 개발 및 남북경협 관련 연구 포함)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중점 연구과제로 ‘동아시아 통합전략: 성장-안정-연대의 공동체 구축’을 선정,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개발 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한국형 개발협력사업의 체계화 및 개도국 대상 정책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KDI의 어제와 오늘은 한국경제의 궤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1960~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시장경제 원칙과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해 세계 무역대국 10위권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중심에 KDI가 있었다. 40년간 오로지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올곧은 외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21세기 한국경제의 진정한 선진화와 글로벌 톱 싱크탱크를 향한 여정에서 남아 있는 길은 멀기만 하다. 이제 겨우 한 고개를 넘었을 뿐이다. 



조병구
KDI 기획조정실장

韓 재정건전성은 양호,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

최 근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복지정책 확대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에는 재정건전성이 있다.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예산의 우선순위 조절과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도 정책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2010년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발한 재정위기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의 경우 방만한 재정 운용과 관광 및 해운업에 편중된 산업구조가 2008년 이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국가부채 규모와 재정적자가 심화돼 마침내 국가 위기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다. 구체적인 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만큼 재정상황이 탄탄하지 못한 것이 위기를 초래한 핵심 이유였다. 실제 우리나라가 1997년의 외환위기를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높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했던 것은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만으로 재정건전성 판단하긴 어려워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채무가 전체 경제규모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합인 국가채무가 GDP 대비 몇 %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기준점을 두어 국가채무비율이 이보다 낮으면 건전하고 높으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다른 요인으로 인해 GDP 대

비 국가채무비율로만 재정의 건전성을 살펴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가령 실질적으로 정부의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보증채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부채, 공적연금의 지급액 부족분 등은 재정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나 국가채무로는 직접 잡히지 않는다. 국가채무비율이 낮더라도 잠재적인 정부의 채무가 큰 경우 재정이 건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국가채무비율이 높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초기자금 부족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사업을 해 큰 이윤을 남기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생산성이 높고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늘릴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채무비율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임은 부정할 수 없다. 국가채무비율을 이용한 재정건전성 평가는 보통 국제비교와 추세 분석을 통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비교를 통한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의 32.6% 수준이었는데 이는 같은 해 OECD 선진국 평균인 89.9%의 1/3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높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른다. OECD 회원국에는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가 닥친 1997년에 12.3%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은 2002년에는

“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 확대나 조세 감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집단이 생겨나 경제 환경이 변하더라도 정책을 되돌리는 것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8.5%, 2007년에는 30.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2.6%로 십여 년 만에 세 배 가량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이 같은 급격한 증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복지지출 증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재정 운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복지지출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 증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출이 잠재성장력 제고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산배분 · 재정지출의 효율성 높여야

이러한 점에 비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재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1970년대 중반 절정에 달했던 케인즈식 재량적 재정정책은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재정정책은 시차가 길고 불확실해 적기에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경기변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제1차 오일쇼크 이후의 잠재성장률 감소를 단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재정지출을 늘린 결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이자지출이 늘어나 다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또한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 확대나 조세 감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집단이 생겨나, 경제 환경이 변하더라도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렵다.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재정 운

용을 정상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예산 배분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경제사회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입각해 분명한 기준을 세워 예산을 배정해야 하며, 사업에 대한 사전적 · 사후적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 등의 제도는 필수적이며 그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도 보다 정밀하고 엄격히 수행돼야 한다. 생산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지출, 나눠먹기식 지출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 통일 등에 소요될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파악을 제고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에 대한 특별한 복안 없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예상치 못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통일 등의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소모적 대결로 흘러 아쉬움이 있지만 오랜만에 정책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번 논쟁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광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대학 교수
kwanghokim@hanyang.ac.kr

“스마트폰으로 통신비 아끼세요”

APP

국 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1천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이미 지난해 ‘스카이프’, ‘바이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포털업체까지 mVoIP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마트폰으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월부터 ‘마이피플’에 무료 인터넷전화 기능을 추가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직 시범서비스 단계지만 입소문을 타고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마이피플의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원리다.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마이피플을 내려받은 뒤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무료통화’ 버튼만 클릭하면 된다. 무료통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마이피플을 받아야 한다. 다만 3G 환경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다. 3G 무제한 요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비스가 차단된다. 물론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다.

마이피플은 바이버 등 기존 서비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국내 유력 포털업체에서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 운영 능력과 기술력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은 일반 유선전화 전송 대역폭의 2배에 이르는 기술을 적용해 CD 수준의 고음질 음성통화 기능을 구현했다. 배터리 소모량도 최소화했다.

스카이프처럼 해외 사용자와 무료로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내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국내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터치링’이 주인공이다. 아이폰용으로 출시된 터치링은 간단한 번호인증과 계정 개설만으로도 해외 사용자와 무료로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역시 와이파이에서는 무료지만, 3G 환경에



무료 음성통화, 무료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Daum ‘마이피플’ 앱(왼쪽), 전 세계 아이폰 유저들을 대상으로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치링’ 앱(오른쪽)

서는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아직 안드로이드폰용 앱은 출시되지 않았다.

무료 모바일 인터넷전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큰 화제가 됐던 서비스다. 음성통화 기능을 제공한 ‘스카이프’와 ‘수다폰’ 뿐 아니라 ‘탱고 비디오콜’과 같은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도 등장했다. 아이폰4에 내장된 ‘페이스타임’과 같은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도 있었다. ‘바이버’ 역시 국내에 술한 화재를 뿌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동통신사와의 갈등 탓이다. 와이파이의 경우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3G 환경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이들 서비스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3G망을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우려한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은 3G 무제한 가입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사이에서 문자메시지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톡’의 사례처럼 통신비를 절약하기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일일이 제한할 수도 없는데다 통신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스마트(smart)한 사용자와 개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gustin99@mt.co.kr



꺼지지 않은 유럽 재정위기

1999년 출범 이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유로존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 지출은 빠르게 증가했고,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금융권 부실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연이은 국채발행으로 위기는 진정세이지만, 이들 국가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은 유럽 재정위기, 그 이유와 생생한 현지 분위기, 그리고 유럽 경제의 미래를 『나라경제』가 심층 분석한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유럽

차에서 내리자 땅끝까지 얼어붙어 있었다. 다보스의 첫인상은 일본의 문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 첫 문장 그 자체였다. 미끄러운 다보스 거리를 미끄러지지 않고 자신 있게 발 딛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엉덩이에 불이 붙어도 뛰지는 않겠다는 것 같았다. 마치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미끄러져 예쁜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처럼.

5일 일정으로 다보스를 취재한 기자는 다양한 인사들에게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들었다. 재미있게도 그들과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았던 단어는 바로 '조심스러운 낙관론'(Cautious Optimism)이었다. 하지만 '낙관론'에 방점을 찍었던 사람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뿐이었다. 나머지는 '조심스러운'이라는 단어에 더 강한 악센트를 주고 있었다. 하마다 준이치(Junichi Hamada) 도쿄대 총장은 "정치인들의 말과 현실은 언제나 다르다. 나는 그들의 말을 항상 뒤집어 보는 습관이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언론에 비친 다보스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는 "유럽 재정위기 문제는 크지 않다"는 쪽이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손을 내치며 "유로화는 유로존 그 자체다. 절대 유로가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끌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회복은 확인됐다"고 표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0년이 유로화 고난의 해였다면 2011년은 유로화 재탄생 원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드러난 '낙관론'(Optimism)이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은 철저한 양면성을 갖고 있었다.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Cautious) 있었기 때문이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월 27일(현지시간) 갑자기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

던 ECB 총재와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 블룸버그가 전 세계 경제전문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향후 5년 내 유로존을 탈퇴하는 회원국이 적어도 1개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답한 내용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이었다.

특히 유럽과 지리상 가까운 북아프리카의 소요사태가 포럼 기간에 맞춰 뉴스로 중계되자 조바심은 극대화됐다. 다보스에서 2011년을 위협할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이 지목받은 이유도 사실 이집트나 튀지니 사태가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앞으로 정치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집트 등에서 보이는 소요사태는 단지 아프리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페인 등 다른 유럽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시장이 낙관론으로 기울고 있지만 유럽의 근본 문제는 남아 있다"며 "앞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는 "유럽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의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유로화 해체 가능성을 경고했다. 존 페라로 언스트 & 영 최고운영 책임자(COO)는 "인플레이션, 더블딥, 과잉규제 등의 문제보다 2011년을 뒤흔들 최대 위험 요인은 바로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장 붕괴 위기'다"라고 일갈했다. 나라경제



신현규

매일경제신문 지식부 기자
haneul96@gmail.com

이달의 이슈

까지지 않은 유럽 재정위기 | 진단

재정위기 확산 기로에 선 유럽 경제

지난 1년간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악화와 완화 국면을 반복하던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중심으로 확산될 기로에 서 있다. 연초부터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과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포르투갈의 CDS 프리미엄(5년)은 지난 1년간 270bp, 국채금리(10년)는 3%p 정도 급등했다. 같은 기간 중 스페인도 CDS 프리미엄이 110bp, 국채금리는 1.4%p 정도 상승했다. 포르투갈에 대한 시장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EU가 수개월째 추가 대책 마련에 혼선을 빚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포르투갈은 외채 및 경상적자 과다 등으로 펀더멘탈이 취약하고, 전년 중 재정긴축 실적 또한 저조해 다시금 국제투자자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포르투갈의 총외채는 GDP의 232%(2009년)에 달하고 경상적자는 10.7%(2010년) 수준이다. 정부는 2010년 재정적자 목표(GDP의 7.3%) 달성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해 현금성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오히려 1.4% 늘어난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포르투갈 텔레콤의 기업연금으로부터 GDP의 1.5% 상당 자금을 재정에 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향 등이 겹쳐 시장 신뢰가 추가 악화될 경우 차입금 만기 상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포르투갈은 3~4월에 각각 40억유로 내외 규모의 국채 만기가 도래한다.

포르투갈 위기 발생 시 경제적·지리적 최인접국인 스페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포르투갈 대외 차입금의 34% 이상을 스페인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페인은 재정적자 축소에 성공했고, 정부부채 규모(GDP의 64.4%)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금융 부실 및 높은 실업률(2010년 4분기 20.3%) 등과 같은 고유의 위험요인



한 여성이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한 가판대 앞에서 포르투갈의 재정위기와 관련한 기사로 장식된 신문과 잡지들을 보고 있다.

을 안고 있다. 포르투갈 대출의 부실 우려에다 이러한 요인이 동반 부각되면 스페인의 금융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 여타 중심국가 간의 채무관계 등을 감안하면 스페인 위기는 유럽 중심국가들에게도 전이될 수 있는 사안이다.

추가 구제금융 여부와 무관하게 유럽 재정위기는 상당기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의 위기 대응이 구조조정보다는 유동성 지원 위주에 그친데다 대부분 국가들이 취약한 성장 잠재력 및 지속적 재정적자 감축으로 상당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국채금리 수준이 크게 높아져 해당국 정부와 민간이 모두 극심한 부채부담에 시달릴 것이다. 난관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부장
wdkim@kcif.or.kr

환율의 조기경보 역할 상실한 유로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직면해 온 만성적인 문제이다. 1997년에 도입된 성장·안정협약(SGP)은 안정적인 통화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각각 GDP 대비 3%와 6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SGP의 기준은 상한선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수 감소와 더불어 경기부양책과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한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불러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한 남유럽국가들과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비중은 크게 증대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권 부실이 가중된 경우 재정위기의 폭이 더욱 크게 확대됐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방만한 경제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 편으로 유로화 사용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로화, 만성 무역수지 적자와 과대채무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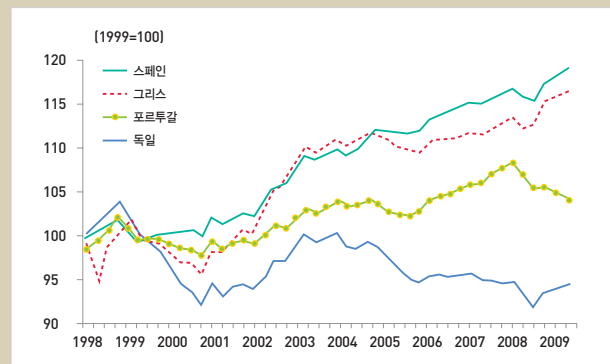
1999년 유로화의 도입은 남유럽국가들에게 환위험관리 비용 및 국경 간 거래비용의 감소, 저금리 자금조달 등의 혜택을 가져왔다. 이러한 혜택이 유럽 내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금융안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 다양한 실증연구들은 유로화가 역내교역과 투자 증진, 생산성 향상, 금리안정에 기여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 사용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환율이 갖는 조기경보 역할의 상실이다. 개별 화폐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국가채무,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같은 대외불균형의 확대는 통화 가치 하락 및 금리상승을 동

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반영돼 대외불균형이 자동적으로 교정된다.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함으로써 환율이 갖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정책의 거버넌스가 취약한 남유럽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갖게 됐다.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는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GDP의 10%에 가까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여기에는 2003년 이후 지속된 유로화의 강세와 이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각국 간의 생산성 격차는 오히려 증가해 일부 국가들의 실질실효환율은 독일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남유럽국가들은 유로화 사용 이후 독일과 같은 안정적인 경제에 편승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국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저금리 자금은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거품경제(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는데, 특히 스페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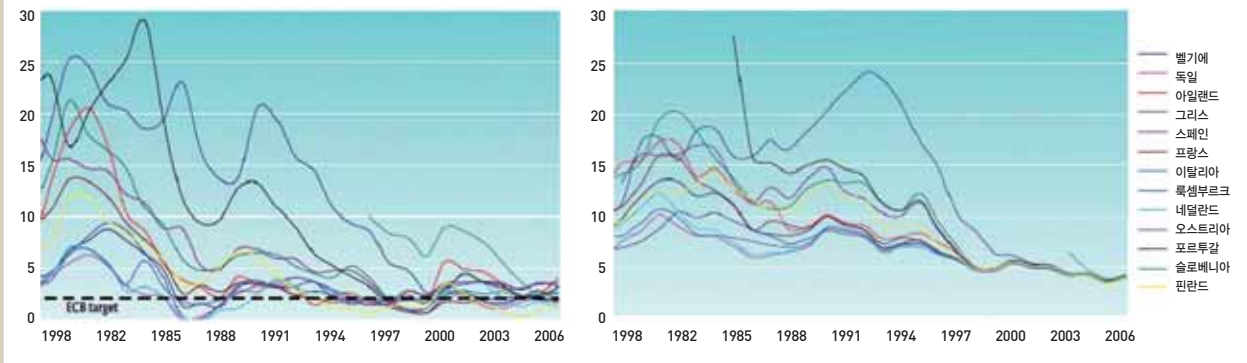
<그림 1>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EU 집행위원회(EC 2008)

〈그림 2〉 유로존 국가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왼쪽), 국채금리(10년 만기) 변화추이(오른쪽)

(단위: %)



주: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상승률 목표수준은 2%임. 자료: EU 집행위원회

아일랜드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결국 유로화 사용은 많은 혜택 이면에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와 저금리로 인한 과대 채무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역내 재정준칙 준수 의지 크게 약화돼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은 독립기관인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해 이뤄지나 재정정책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집행되는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EU는 통화공동체 유지를 위한 준칙으로서 재정정책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SGP를 통해 중기적 재정목표를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에 두도록 하고 있다. SGP가 도입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통화공동체 내에서는 단일 환율과 단일 기준금리로 인해 한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정책의 결과가 다른 나라에 전가(spillover)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가령, 일부 유로지역 회원국이 과도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있을 경우 이는 유로화에 대한 신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자본 이탈 등으로 인해 유로화는 평가절하의 압력을 받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단일 기준금리의 인상은 주변 유로화 사용국에서 투자와 소비 위축을 가져온다. 따라서 재정적자 수준을 비롯한 거시경제 안정성의 관리는 회원국들 간에 통화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통화주권이 ECB로 이관돼 재정정책은 정책조합(policy mix)을 위해 개별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유로화 사용국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실탄'을 남겨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더 이상의 경기부양이 어

려울 경우 통화정책의 확보를 위해 유로화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자의 사전적 규제는 통화공동체의 멤버십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SGP는 중장기적 균형재정을 위한 통제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았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다. SGP에 따르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과대재정적자 시정절차(EDF;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통해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채택된 30여건 이상의 EDF 중 벌금부과 등 경제적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는 전무하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협약의 준수의지가 크게 약화되는 움직임이 표출됐다. 사실 SGP에 대한 찬반 논란은 그동안 계속 제기됐으나 유로화를 사용할 경우 공동체 차원에서의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SGP를 통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정합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각국별로 경기와 재정건전성의 차이로 인해 한계점이 계속 노출됐다. 통화정책이 유로존의 평균 경기를 기준으로 실시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SGP 준수 의지 약화로 인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가 지속됐고, 또한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위기에까지 이르게 됐다. 나라경제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회원국 간 경제적 불균형이 경상수지 양극화 초래

리스본 조약(2009년 발효)을 계기로 보다 강한 유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던 EU의 야심찬 계획은 재정위기와 함께 멀어져갔다.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재정위기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재정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회원국 간 불균형이 고착돼 하나의 통화와 금융정책으로 묶여 있는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다.

유로체제 출범 이후 변방국의 경상적자 확대돼

유로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회원국 간 경제적 불균형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부터 핵심국(서유럽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와 변방국(남유럽 중심)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라는 형태로 누적돼 왔다. 대부분의 변방국에서는 유로체제가 도입된 2000년대 들어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실질실효환율의 절상에 따른 대외 가격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취약

성, 생산성에 비해 고평가된 임금수준, 저부가가치 위주의 상품수출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 폭 확대, 서비스수지의 흑자 폭 축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이다.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해 낮아진 자금조달 비용이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문제는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유로체제가 출범되자 변방국들의 국제수익률이 핵심국인 독일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은행을 통해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입됐다. 이러한 여유 자본은 변방국들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산업에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경쟁에 덜 노출된 부동산 및 서비스 교역재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중저급 이하의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 R&D 투자도 부진해 수출경쟁력은 더욱 취약해졌다. 저축과 건설투자의 불균형도 형성됐다. 실제로 1997~2006년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유로존 평균인 1.9%를 크게 상회한 반면 총저축 증가율은 16.9%로 유로존 평균 20.4%를 밑돌았다.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문제는 재정위기에 치명적이다. 정부의 초과 지출을 국내 민간 부문의 순저축으로 충당할 수 없어 해외차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민간 부문이 초과지출을 하고 있거나 민간 부문의 순저축이 정부 부문의 지출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된다면 외국인투자자에 의해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변방국들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차입에 의해 보전됨으로써 표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었다. 주로 국내 금융기관을



리스본 조약은 27개 회원국 전체가 찬성해야 발효되는데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국민투표가 부결되는 등 고전 끝에 2009년 12월 1일 발효됐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건물 전경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했으며, 유로화 도입과 함께 환리스크가 감소되고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영역이 확대되자 더욱 심화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원국 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지속된다면 남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로존 내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로화 단일통화 기반이 재차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불균형 더 심화되면 유로체제 또 흔들릴 수도

특히 2010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핵심국과 변방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독일은 실업률 감소, 내수 소비 활성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에 힘입어 3.6%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통독 이후 가장 가파른 것이다.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독일 경제에 남유럽 재정위기 상황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핵심국들의 경우에도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등 현재의 위기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변방국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스 경제는 지난 2008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했고 2010년 경제성장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와 저축은행 부실로 위기에 처해 있는 스페인의 2010년 경제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변방국들이 비교우위를 갖는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현재 유로지역의 근간인 유로체제를 다시 한 번 흔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핵심국의 경제회복은 구제금융패키지에 대한 자금도 확보하고 자국에서의 여론도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변방국의 경제 성장이 더딘 상태

〈표 1〉 유로체제의 안정을 위한 전제조건

전제조건	현황 및 전망	충족 가능성
조건 1 구제금융 재원 마련	ECB의 국제매입, 독일의회의 그리스 지원안 등으로 이미 신뢰 확보	긍정적
조건 2 회원국의 긴축정책 집행능력	변방국의 국내 경기회복 + 긴축프로그램 (동시달성 필요)	유보적
조건 3 체제의 취약점에 대해 제도적 보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회원국의 국가 주권 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움	부정적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표 2〉 유로존의 GDP 대비 경상수지

(단위: %)

		1994-1998	1999-2007	2008	2009
유로지역		1.1	0.4	-0.7	-0.7
적자국	스페인	-0.7	-5.5	-9.6	-5.4
	그리스	-2.3	-8.0	-14.4	-8.8
	포르투갈	-4.3	-8.8	-12.1	-10.2
흑자국	독일	-0.8	2.9	6.4	4.0
	네덜란드	5.2	5.0	7.5	3.1
	오스트리아	-2.2	1.1	3.5	1.5

주: 1994~1998, 1999~2007은 동기간 동안의 자료연평균, 2009년은 추정치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가 지속된다면 재정위기 확산 방지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유로체제가 근본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표 1〉에서 보듯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구조적 불균형의 심화는 이와 같은 노력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세 번째 전제조건인 제도적 보완은 위기관리체제 마련, 재정규율의 엄격한 시행 및 재정통합 추진, 회원국의 채무재조정 문제, 통합감독기구 설립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양극화 심화는 회원국 간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EU는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통합된 정치적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는 EU 집행위의 정치력이 미약해 남유럽 재정위기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에 역부족이었다. EU 집행위가 어떠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향후 리스본 체제의 성공적 작동 여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통합된 EU의 정치·경제적 위상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나라경제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jking.lee@samsung.com

독일, EU경제 견인... 통독 이후 최고 성장

경 제성장률 3.6%(통독 이후 최고, EU 평균의 2배), 물가상승률 1.1%(원자재가격 인상 속 안정된 물가 수준 유지), 실업률 7.3%(1992년 이후 최초, 300만명 이내로 축소), EU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대국 독일의 지난해 성적표다. 2010년 금융위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독일은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서구경제권 중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독일의 부활뿐 아니라, 남유럽 재정위기로 휘청거리는 유로존의 수장 역할 및 교역관계를 통해 독일제품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를 이웃 중동구 국가들로 확산시키고 있다.

경기 낙관한 기업들 투자확대 추세 유지

수출주도형인 독일경제의 회복에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외에도 내수 부문의 소비증가 및 투자확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파급효과 및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도 수출기업에는 큰 호재로 작용했다.

2010년 수출증가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독일은 내수시장에서도 수출 상승세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예상 GDP를 기존의 1.8%를 상회하는 2.25%로 상향 조정했으며, 실업률도 2010년 7.7%보다 감소한 7.0%로 전망했다.

소비시장은 2010년 수출로 이룩한 경제성장이 임금인상, 일자리 증가 등 내수소비로 이어지면서 올해 수출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시장연구기업 'GfK'는 최근 2011년 독일 개인소비가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전년

의 0.5%보다 크게 상승한 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 묶여 있던 임금인상이 2011년 3.2%의 임금인상을 결정한 폭스바겐사를 필두로 임금단체 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 올해 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서 290만명까지 실업자 수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분야의 경우, 독일 기업들의 경기 낙관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2011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특히 자동차, 기계, 화학 등 독일의 수출 위주 주력산업이 2010년에 이어 투자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과 관련해 2015년까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20억유로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중국과 헝가리 등의 해외 생산거점형 투자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독일의 강점인 녹색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태양광 분야는 지원의 축소로 감소세가 예상되나, 풍력발전 단지 건설 사업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화학 분야에 있어서도 바이엘(Bayer), 바스프(BASF), 랑세스(Lanxess), 바커 케미칼(Wacker Chemie) 등 대표적인 독일 글로벌 기업들이 2010년 12월 대대적인 중국 및 아시아 생산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신소재 개발과 관련해 현재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R&D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승일로를 걷고 있는 독일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기업 측면에서는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리스크가,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손꼽히고 있다. 최근 독일 상공회의소가 2만8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최대의 위

협요소로 꼽았다. 특히 가격전가가 힘든 식료품 산업 등 내수산업의 경우 소비자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2011년 1월에 이미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한 물가가 2%대로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자, 인플레이션이 임금인상의 기대효과를 잠재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원자재가격·임금 상승은 제품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토록 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최대 위협요인

특히 인플레이션 문제는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독일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2010년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상징하는 유로화가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가자, 수출 주도의 독일경제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세계경제 회복세로 인한 독일제품 수요에 유로화 약세가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린 유로화 수호 차원에서 유럽 정치권의 이해를 반영해 국제매입 등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한 유럽중앙은행은 향후에도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확장기를 맞은 독일경제에 맞지 않는 낮은 이자율은 경기과열을 불러오고 임금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방치 시에는 통독 이후 독일병을 이겨내며 사회적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아온 독일의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위기 대응에 이미 착수했다. 예상되는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비,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및 원재료 절감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를 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지난해 상반기 세계 최대 고급 자동차 제조회사인 독일 BMW의 순이익은 8억3,400만유로로 6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독일 뮌헨의 BMW 본사 건물

늘고 있다.

BMW는 생산차량당 에너지 수요를 9% 줄인다는 목표 아래 프로세스를 개선해 오고 있으며, 리사이클 알루미늄 사용 강화를 통한 차량 프레임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화학기업 헨켈(Henkel)은 내년까지 2007년 대비 15%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 사용량 및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수요는 작은 부품부터 거대한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신소재 및 신기술 관련 투자개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원자재가격 상승 및 가격인하 압력 속에서 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외부와의 협력 관계를 늘리고자 해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업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부문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조일규

KOTRA 프랑크푸르트
KBC(Korea Business Center) 차장
ahhaee1@kotra.or.kr

스페인 가계부채, GDP의 85%에 육박

스페인을 비롯한 서·남유럽 재정위기는 대규모 재정적자와 대외부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에서 발발했다. 국가재정악화와 정부부채 증가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과 급격한 실업률 증가에 따른 세입 감소 때문이다.

스페인이 국가신용 위협을 받는 또 다른 원인은 가계부채다. 스페인 가계부채는 부동산 붐에 맞춰 2000~2010년 사이에 3배로 상승, 현재 GDP의 85%에 육박한다. 이미 지난 2009~2010년 중 가계부채로 파산을 신청한 가정이 연간 1천가구를 넘었으며 경제 호황기였던 2008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장기 저금리로 주택투기 심리가 확산됐고, 건설경기까지 활성화되면서 2000~2007년 주택가격은 매년 약 20% 이상 상승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가 스페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민간 소비를 장기간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붐이 꺼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도 연이은 하강세를 기록했다. 막대한 가계대출 규모에 200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늘어난 실업률(20.33%, 2010년 말)이 가세하면서 경제회복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재정적자와 불경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높은 실업률이 경제 발목을 잡아

2011년 1월 아일랜드 구제금융이 확정된 직후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재점화된 원인으로는 투자자들이 다음 대상으로 1순위 포르투갈, 2순위 스페인을 지목하는 데 있다. 이런 불안감에 대한 배경에는 첫째, 스페인을 구제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재 조성된 7,500억유로의 EU재정안정기금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스페인이 보유한 포르투갈 국채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 위험노출)가 높아 포르투갈이 무너지게 될 경우 스페인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 스페인 정부가 2011년에 약 1,100억유로 규모의 국채만기가 도래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우려다.

스페인 금융시장은 2010년 초부터 내외적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가, CDS프리미엄, 국채 스프레드 등 주요 금융지표들이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2011년 초에도

아일랜드 위기가 전이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가 국가재정, 금융, 연금, 노동 등 다각적인 개혁을 잇따라 내놓아 금융시장은 현재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페인 정부는 2009년 9월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부가세(+2%p) 등 일련의 세금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긴축재정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사회보장 지원금의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1차 긴축정책은 150억유로를 감축하는 데 목표를 둔 반면 2차 긴축은 144억유로 규모의 삭감을 통한 정부재정 개선과 중소기업 활성화에 맞춰 수립됐다.

주택 모기지 대출에 집중해온 저축은행들은 부동산시장 하락에 따라 큰 타격을 입었으나 통·폐합,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 확충 등 내실화를 다지는 구조조정이 진행돼 건전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동산버블 붕괴로 부실 위험이 확대된 저축은행 간 통·폐합이 추진됐으며 그 결과 45개의 저축은행이 17개로 축소될 예정이다. 더불어 스페인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은행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핵심자본비율을 6%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 이 결과 2011년 2월 들어 카익사(Caixa), 카자 마드리드(Caja Madrid) 등 스페인 주요 저축은행은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 확충, 내실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해 스페인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 말 20.33%까지 상승한 실업률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지적해온 높은 해고비용(연 월급여의 1.5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고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주세 감면을 골자로 한 고용창출 정책을 수립했다. 청년 및 장기 실업자를 중심으로 10만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경제 펀더멘털 튼튼해 아일랜드 전철 밟지는 않을 듯

적자 문턱에 다다른 연금제도의 개혁도 단행됐다. 수명 연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부부담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논의된 근로자 정년 연장(65→67세)이 올 1월 말 노·정 간 타결돼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사회보험비용을 25~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시경제 측면에서 현재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재정 외에 세금인상, 사회보장 지출 축소 등 그 어떤 형태의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6월 16일 20%에 가까운 실업률을 낮추고 '제2의 그리스'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동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스페인 의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경제장관의 모습

추가 정부지출 삭감도 궁극적으로 소비자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거시경제에서 볼 때 국가신용에 대한 불신은 국채 발행에 따르는 이자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10년 중 발행한 국채에 대해 예년 입찰 때보다 이자를 약 10~85%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스페인 정부의 금융비용 상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신용 불신이 기업으로 옮겨가 이들의 대출이 어려워진 한편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및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추가 긴축재정, 소비위축 등은 경제성장 둔화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상황과는 거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스페인 금융권 유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국가 재정도 긴축정책 덕분에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09년 말 GDP의 55%에 달한 정부부채는 2010년 말 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EU 평균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 스페인 재정적자도 당초 목표대로 2009년 말 GDP의 11.1%에서 2010년 말 9.3%로 감축돼, 2013년까지 EU 재정적자 기준치인 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정아
KOTRA 마드리드
KBC(Korea Business Center) 과장
clara@kotra.or.kr

유로단일통화체제의 근본적 재편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0월 29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왼쪽)과 헤르만 반롬피이 EU 이사회 상임의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의 일정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로존이 직면한 위기는 ‘여러 국가가 단일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최적통화지역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위기의 원인을 남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찾는 것은 유로단일통화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최적통화지역이 아닌 유로존

여러 나라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논의는 1961년 먼텔(R. Mundell)이 처음 제기한 이후 많은 연구가 이어졌다. 먼텔은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생산요소의 높은 이동성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후 먼텔의 조건 외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다.

맥किन(McKinnon)은 경제개방도(비교역제에 대한 교역재의 비중)가 높고 유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케닌(P. Kenen)은 회원국 간 생산의 다각화 정도가 비슷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슨(I. Johnson)은 금융·재정적 통합을, 칸들버그(J. Kindleberger)는 경제주체의 선호에 대한 동질성을 핵심 조건으로 추가했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들은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충족될 수 있다. 먼텔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가 용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가격이 빠르게 조정돼야 하며 국가 간 사회·문화적 차이가 노동자의 이주에 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

다. 하지만 명목임금은 사실상 쉽게 하락하지 않으며,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대표적 단일통화지역인 미국에서 유로존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만, 유로존과 미국은 다르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어렵지 않게 다른 주(state)로 이주하지만, 유럽 노동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 쉽게 이동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유럽과 달리 전국적 단위나 산업별 단위로 임금협상을 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시장도 유럽에 비해 매우 유연하다. 만델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유로존이 최적통화지역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유로존 출범 11년의 현실은 유로존이 최적통화지역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장이 개방되고 화폐가 통합됐지만 임금도 가격도 수렴하지 않았다. 자본시장은 빠르게 통합돼 유로존의 변방국(PIGS 국가 등)이 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해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었지만, 투자는 산업생산력 향상을 외면하고 부동산과 건설 부문으로 몰렸다. 그리고 늘어난 소비는 수입을 늘렸다. 결국 유로존 10년 동안 회원국 간 경쟁력 격차는 확대되고 경상수지 불균형은 심화됐다.

세계 금융위기로 변방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하자 유로존 국가들의 가려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세수는 급격히 줄었으며 공공부채 비중은 순식간에 위험수위를 넘었다. 위기를 모면하려면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환율정책은 수단이 될 수 없었고 산업경쟁력은 취약해져 있었다. 결국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고 대외부채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고, 유럽의 위기가 시작됐다.

긴축정책·재정연방주의, 해결책 될 수 없어

유럽 정치지도자들은 PIGS 국가의 재정위기가 방만한 재정운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정책과 임금삭감 등은 내수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GDP 적자 비중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임금삭감, 고용 및 복지 축소는 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좌절될 수 있다.

현재 위기 타개책으로 이론적 타당성이 있는 방안은 재정적 연방주의를 확립하자는 것이다. 단일통화지역을 구성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성격이 크게 다르더라도 재정통합이 돼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전체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다.

유로존에 재정연방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국가의 틀을 뛰어넘는 시도이다. 재정통합은 조세제도와 재정운영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정치적 연대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정치사회에서 가장 강한 연대감을 가진 공동체는 개별 민족국가이다.

미국 등 연방국가의 사례를 비춰볼 때, 재정연방주의를 확립하려면 연방예산이 전체 예산의 50~60%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로존 GDP의 1%에 불과한 유로연합 재정이 최소 6~8%의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 독일과 같은 핵심국의 국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단일 주권하의 유럽합중국을 꿈꿔온 유럽주의자들은 조세권의 행사 범위를 정치지도자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지만, 조세권은 곧 주권이며 주권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정치인들 간의 합의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정통합은 유럽의 정치현실과는 거리가 먼 안이다.

유로존이 경제이론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건에서 출범하게 된 것은 낡은 민족국가의 주권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오직 '유럽' 단일 주권의 연방국가를 만들자는 유럽엘리트들의 이상주의의 결과이다. 그 결과 유로단일통화는 정치제도에 진입하지 못해 너무 일찍 고도가 낮아지는 인공위성과 같은 처지에 있다. 궤도진입에 실패한 인공위성은 하락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정지궤도로 다시 보낼 수는 없다.

유럽 정치지도자와 정책담당자들은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 유로화의 위치를 고수하려 들지만 유로통화체제의 근본적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새로운 대안은 자국화폐를 어떤 식으로든지 부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나라경제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eungyoo_pa@hotmail.com

유럽 전체의 혼란은 조만간 수습될 것

그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금융재정위기가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아일랜드를 거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초 독일의 국채금리(10년물)는 약 2.9%인 반면, 포르투갈 국채금리는 7% 이상으로 급등했다. 스페인도 2000년 이후 최대치인 5.5%까지 도달하면서 금융위기 재발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세계경제 7위인 이탈리아의 금융위기까지 화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유로화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유럽 통합의 위기가 지 성급하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경제, 특히 유럽 통합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유럽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지에서 기인

우리는 유럽을 항상 지나친 사회보장으로 재정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경제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의 통합과정과 유로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유럽 경제가 활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 전체로 봤을 때 공공부채의 비율은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미국에 대해서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수많은 유럽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효율적이고 국제화에 앞장서 있는 것으로까지 조사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통합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유럽은 이를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가장 가까이는 1992~1993년에 있었던 유럽통화체제(EMS)의 위기를 들 수 있다. 금융위기에 따라 영국과 이탈리아가 즉각 이 시스템에서 탈퇴했으며 유럽 통합은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그러나 유럽제국은 이러한 위기를 기

회로 만들어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통합을 이뤄냈다. 최근 유로화 위기와 관련해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우유부단함과 지도력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아시아 통합과 비교했을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타협과 협상에 있어 항상 필요할 때 그 역할을 다했다.

유럽 경제와 유럽 통합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지에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무대의 변방에 있었던 우리나라에게 서구사회를 이해하는 첩경은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유럽, 특히 비영어권인 유럽대륙은 무시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나 언론은 대체적으로 유럽 통합이나 유로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유럽을 잘 알지 못했던 우리는 그대로 그 견해를 수용하게 됐다.

유럽 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1999년 유로화가 출범하기 전의 상황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오늘날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남유럽국가에서와 같이 유로화가 출범하기 전에도 금리는 큰 격차가 있었다. 예컨대 1995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경우 독일과의 금리차는 5%까지 달했다. 단일통화의 도입에 따라 이들 국가의 금리가 독일 금리수준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국채에 투자하면 막대한 금리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쉽게 예측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최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국채 금리 급등은 유럽 통합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된다면 우리에게 다시 큰 금리차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활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의회 건물인 레인스터 하우스 밖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긴축 예산안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폭 평가절하된 환율에 기인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유럽은 지금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게 두 번째 큰 교역국이자 우리나라 제일의 투자국이다. 현재 유로화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남유럽국

국제수지 불균형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구조조정

한편 유럽의 금융·재정위기는 위기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제경쟁력의 유지란 점을 환기시켜 줬다. 유럽의 경우 지나친 복지제도로 인한 재정위기가 강조되고 있으나 실상 이러한 재정위기는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급작스럽게 높아진 데 기인한다. 근본적으로 현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남유럽국가의 문제는 금융 부문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빚이 급증한 데 있다. 이도 상당부분 국제경쟁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로화의 출범에 따라 그리스를 포함한 많은 남유럽국가들로 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됐고, 부동산 투자 붐이 발생했다. 동시에 크게 증가한 임금과 물가상승률로 인해 남유럽국가들은 독일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그러나 단일통화로 인한 환율평가절하라는 방법을 통해 경쟁력 상실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하는 것뿐이다. 이런 점에서 유로화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독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독일의 역내수출은 유로화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국가의 금융·재정위기는 환율의 신축적 운용이

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독일 등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하고 있어 일부 남유럽국가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의 혼란은 조만간 수습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할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유럽의 영향이 쇠퇴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라 아시아 경제권이 향후 세계경제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미국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최적의 위치를 갖고 있다. 한미 FTA나 한·EU FTA의 체결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들 FTA는 향후 시장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경제,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우리의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번영을 누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돼 온 FTA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높일 때이다. 나라경제



문우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mwosik@snu.ac.kr

소수세력의 원리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소수세력(minority power)'의 원리를 강조했다. 제2물결의 주요 원리인 '다수결 원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이다. 제2물결 사회에 있어서 다수결 원리가 좋았던 것은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좋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제3물결 사회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더 이상 정당한 원리가 아니라고 한다. 이유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사회에서는 이것이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래서 제3물결 사회에서는 소수파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적절한 정치제도의 부재가 소수파 간의 대립을 불필요하게 격화시켜 이들을 비타협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수용하고 날로 늘어나는 이들의 각종 요구를 감안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고 한다.

이 책은 1980년에 쓰인 책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다수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아무리 소수라도 극렬하게 반대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하는 일도 그렇다. 정부의 정책치고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다. 이 경우 다수 국민이 찬성하더라도 소수가 강하게 반대하면 더 이상 일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된다.

지나간 일이지만 세종시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수도 분할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를 옮기려면 전부 옮기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반쯤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 그 지역에 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정치적으로 이미 약속한 것을 바꾸는 문제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아 타당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안이 나오자 일부 정치권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하게 반대했다. 결국 국회가 법 개정에 반대함으로써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만일 국민투표에 부쳤더라면 정부의 수정안이 통과됐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다수가 지지하는 내용이 왜 좌절되고 말았는가. 한마디로 정부가 옳은 일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한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처음부터 이들을 꺼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전에 만나서 상의하고 고충을 들어준 다음 사안의 불가피성을 차근차근 이해시켰더라면 그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옳다고 해서 다 되는 세상이 아니다. 다수가 찬성하더라도 소수가 강하게 반대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원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 유불리(有不利)를 따져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기에 인간을 두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즈음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앨빈 토플러의 소수세력의 원리이다. 일찍이 다수결 원리의 무용론을 제기했거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이제 이 일을 어쩌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수도 분할의 문제를...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yilee2020@hanmail.net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무부 증권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후 2009년 세계미래포럼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저·역서로는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 「미래와 세상」, 「미래진단법」 등이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복권'을 떠올릴 것이다.

비단 일주일의 행복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데에도 복권이 활용된다.

지난 2004년 기획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고

이를 관장할 복권위원회를 구성했다.

1천원짜리 복권 한 장을 사면 50%는 당첨금, 8%는 판매·발행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420원은 기금으로 조성돼 각종 공익 사업에 쓰인다.

『나라경제』는 숨겨진 복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복권 한 장으로 희망과 나눔을 산다

1962년 조선일보엔 첫 주택복권 당첨자로 정점룡 여사가 등장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친정나들이를 왔다가 박람회 구경을 하며 산 복권이 당첨돼 그는 당시 225만원의 주택을 받았다. 복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라 많은 이들은 신기하고 부러운 눈으로 이를 지켜봤다. 이후 정기적인 주택복권 발행은 1969년 시작돼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복권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살기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교적 손쉽게 재원을 얻을 수 있어 고대부터 활용

됐고 지금도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 없는 조세(painless tax)'라고 칭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복권시장은 1990년대 이후 크게 활성화됐다. 주택법,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10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복권을 발행해 60여개의 복권상품이 판매됐다. 그러자 과열경쟁에 의한 사행성 조장, 수수료 과다지급 및 중복투자, 감독기관의 비효율성 등이 논란이 됐다. 또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자원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으며, 복권으로 조성된 재원이 일반예산과 혼용되는 등 투명성이 떨어져 복권업무 체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더욱이 2002년 12월 로또복권이 도입되면서 복권의 공익적 성격은 가려진 채 '인생역전', '대박'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이미지로 복권이 언론에 화자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2004년 4월 1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을 시행, 복권위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원들이 독거노인과 함께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다.

원회를 구성해 관련 업무를 일원화했다. 또 복권사업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1인당 판매한도 제한, 광고 제한 등 각종 건전화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권리를 존중해 복권수익금의 30%는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70%는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5대 분야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제도화했다.

현재 복권법에 의해 발행되는 복권은 온라인복권(로또복권), 인쇄복권(즉석식, 추첨식), 전자복권 세 가지, 12종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복권위 집계 결과 지난 2010년까지 17조8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중 8조2천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됐다. 복권기금 조성률은 2009년 40.7%로 제도 도입 당시 37.5%에 비해 상승했다. 로또복권 판매 당시 4조원 가까이 올랐던 복권매출액은 평균 2조5천억원 규모로 안정세를 띠게 됐다.

효과적인 수익금 사용과 투명성 증대로 이제 국민들은 복권 한 장에서 희망과 나눔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됐다. 

“복권법 목적 이미 이뤘죠, 이젠 업그레이드를 꿈꿀 때”

강준희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 사무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제정 당시 상황은 어땠나?

주택복권, 체육복권, 기술복권, 녹색복권 등 다양한 복권이 여러 기관에서 발행되고 있었다. 기관마다 감독이 분산돼 있고, 과당경쟁도 비효율적이라 일원화하지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이 제정됐고, 복권위원회가 꾸려졌다.

복권마다 원래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중복 운영도 적절치는 않았다. 사업을 통일한 후 기존 복권발행권리를 인정해 법정배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권수익금의 30%였는데 지난해 문화재보호기금이 추가되면서 35%로 늘었다.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복권위가 법 취지에 맞게 저소득 주거안정·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한다. 특정 목적만을 위해 복권상품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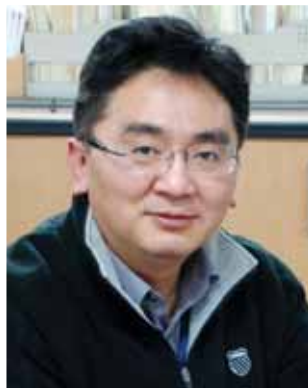
모든 복권을 복권위가 총괄하는 건가?

물론이다. 복권은 복권법에 의해서만 발행된다. 매년 복권위가 발행계획을 수립해 발행규모, 발행매수, 예상판매량, 액면가액 등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위탁사업자가 발행과 판매를 대행한다. 매주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걸 필요한 사업에 맞게 지원한다.

공익사업의 경우 복권위가 직접 하나, 위탁을 하나?

복권법의 사용용도에 맞는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주택기금, 여성발전기금과 같은 이름으로 담당부처에 전달하면 의도에 맞게 집행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다만 재원이 복권기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앞으로는 이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취재 중에 스포츠토토가 복권이 아니란 것을 알았



다. 세계복권협회 기준과 다른데?

우리가 정의하는 복권은 추첨 등의 방법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의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경마나 토토는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권처럼 동등한 확률의 일이 아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이 다르다.

제도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적정 수준의 재원을 조성해야 하니 많이 팔리면 많이 팔려서 걱정, 적게 팔리면 적게 팔려서 걱정이다. 한편으로는 복권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금액이 제한돼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또 2002년 도입된 로또복권의 ‘인생역전’ 이미지 때문에 아직도 국민들이 복권을 사행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복권의 사행성을 우려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유난히 우리나라만 그렇다. 기금조성, 오락제공, 불법사행사업 대체 등 복권의 순기능도 많은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복권법 시행 7년째다. 현재까지를 평가한다면?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복권시장의 난립이 정리됐고, 수익률과 투명성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복권사업, 기금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하는데 힘쓰려 한다. 또 그동안 복권구매자와 당첨자들에게 소홀한 면이 있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따라 당첨금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당첨자 신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당첨금을 일시에 쓰지 않게 분할지급도 가능하게 해 안정적인 생활보장 기능까지 덧붙였다. 나의 경제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어르신들의 공연관람 많이 늘어 보람”

김현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팀장

사랑티켓, 사랑을 전달하는 티켓인가?

하하. 사랑티켓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중 하나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개인은 공연 7천원, 전시 1천원을 연 10회, 단체는 공연 5천원, 전시 1천원을 연 1회 지원해준다. 1991년 처음 시행 당시는 일반인 대상의 공연할인 쿠폰이었다. 연극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사랑티켓을 사면 관람료를 할인해 줬다. 2008년에 복권기금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문화소외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

사랑티켓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문화소외계층은 크게 연령과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령으로는 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이며, 지역은 서울·경기·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거주자다.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겐 전국에 있는 관객지원센터 및 지역주관처를 통해 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바우처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나?

문화바우처 역시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종이지만 사랑티켓과는 조금 다르다. 문화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연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대상이 명확히 한정된다. 반면 사랑티켓은 문화나눔 사업 중 수위로 보면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사랑티켓 단체회원이나 서울·광역시·경기 지역의 3~15세 회원은 동반자도 3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일반인도 포함된다.

회원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만명을 넘어섰다. 회원 수가 매년 20% 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회원의 증가율이 높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회원의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9세 이하가 18.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근소한 차로 90대가 18.35%, 80대가 17.4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회원가입이 많아지면서 이 연령층의 공연관람비율도 늘고 있어 사업의 보람을 느낀다. 지난해에는 연세가 94세이신 어르신께서 공연을 관람하셨는데, 그동안 사랑티켓을 이용하신 분들 중 최고령이셨다.

아직 사랑티켓을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렇긴 하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40여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라디오·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회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원금액을 높이고,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기존 회원의 반복 사용보다는 새롭게 사랑티켓의 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좋은 작품이 사랑티켓 참가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지역마다 번거롭게 매번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의제도를 보완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사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등 선정제도도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복권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 사업이 없다

2004년 복권기금이 설치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의 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개별 법률에 의해 복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을 소관 기관의 사업에 활용했다. 그 결과 복권 발행의 난립 및 과당 경쟁이 초래됐고, 복권수익금이 여러 기금에 분산돼 다른 재원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약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복권 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하고 복권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해 2004년 4월부터 시행하고, 복권수익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게 됐다.

정부가 복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재원조성의 역진성 등의 문제도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재원 조달 수단으로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권수익금을 ‘좋은 용도’의 목적사업에 활용해 ‘이로운 외부효과’를 보다 많이 창출해야 한다. 복권수익금의 지출 대상이 되는 ‘좋은 목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복권수익금에 용도를 지정하는 ‘귀 표적기’(earmarking)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는 복권기금의 지출 대상인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의 범위 및 구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복권 발행 및 복권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사업 선정이 이뤄지지 못했



2009년 12월 복권위원회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권 인식조사에서 국민의 60%가량은 1년에 1회 이상 복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중로의 한 복권방 모습

다. 이로 인해 목적사업의 선정이 적절치 못하고 나눠먹기식 자원배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복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사업수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법적 제약 조건으로 인해 사업선정을 합리화하는 데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복권기금제도 준립의 정

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운용을 통해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권기금 조성 기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차별화된 지출 용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이 복권의 주 구매층인 중산층 이하 소외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과 지출용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타 기금에 전출되는 재원 규모를 축소하고, 복권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에 자원배분을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복권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외부효과가 크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권기금의 핵심지원 대상사업, 일명 ‘간판(land mark)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는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박재기



박재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kg1000@ch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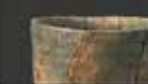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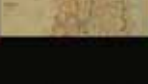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20 MASTERPIECES OF KOREA

World leaders of G20 have met 20 masterpieces (M20) of Korea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ere the welcome reception and working dinner of G20 Seoul Summit was held on November 11, 2010. Visi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meet the M20 now.

Visitor Information Tel. 02-2077-9000 www.museum.go.kr

	1. Comb-pattern Pottery
	2. Stone Dagger
	3. Duck-shaped Pottery
	4. Mural Fragment of an Equestrian Figure
	5. Baekje Incense Burner
	6. Horse Rider-shaped Vessels
	7. Gold Crowns, Belt, Crown Ornament
	8. Pensive Bodhisattva
	9. Maitreya Bodhisattva and Amitabha Buddha
	10. Reliquary from the East Pagoda of the Monastic Site of Gaeumsa
	11. Ritual Ewer (Kundika)
	12-1. Metal Type of the Goryeo Period
	12-2. Print Made with Tripitaka Woodblocks Carved with a Prayer to Buddha to Drive Away Khitan Invaders
	13. Maebyeong, Vase
	Celadon with Incised Lotus-scroll Design
	14. Ten-story Pagoda
	15. Jar
	White Porcelain with Plum and Bamboo Design in Underglaze Iron-brown
	16. Bottle
	White Porcelain with Rope Design in Underglaze Iron-brown
	17. Album of Genre Paintings by Danwon (Kim Hong-do)
	18. Endless Rivers and Mountains
	19. Album of a Journey to Songdo
	20. Complete Map of the Eastern State



NATIONAL MUSEUM OF KOREA

Official venue for the welcome reception and working dinner of
G20 Seoul Summit held in Seoul on November 11-12, 2010

행복한 중소기업이란,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치는 곳. 『나라경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행복한 중소기업’을 소개한다.



“국산시리얼의 힘을 보여주마!”

(주)도울F&B

회사 정문에서부터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하나같이 웃고 있다. 왜일까? 전화를 받는 목소리도 어찌나 상냥한지 시샘이 날 정도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다들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냐고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더 가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자체가 행복해요” 사무실 한쪽에 걸려 있는 액자. ‘왜’라는 짧고 굵은 한마디! 질문을 던져 항상 새로운 기술개발에 힘쓰자는 의미다.

1998년에 설립된 도울F&B는 전남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가장 많이 가공·유통하는 회사다. 스낵류인 후레이크 제품과 시리얼, 차류와 분말건강식 등 40여종의 가공식품을 파리바게뜨·웅진·빙그레 등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서양식인 시리얼 제품을 순수 국산원료와 독자적 제조기술로 차별화해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등지에 역수출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자락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다 보니 아토피 등에 효과가 커 제품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다.

직원이 40여명에 불과한 작은 기업이지만 세계 최초로 S.C.W 제조 방식을 적용해 곡물의 배아분리에 성공했는가 하면, ‘통곡물 볶음식 제조방법 및 그 통곡물’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는 등 기술개발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09년에는 일본 최대의 식품전시회인 ‘FOODEX’와 5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려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FTA로 인해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과 ‘국산원료 사용’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해외 세미나와 박람회는 무조건 지원하는 ‘통 큰’ 회사 도울F&B에선 동호회 활동도 남다르다. 탁구·당구·음악밴드 동호회 등이 있는데 특히 회사대표와 함께하는 밴드활동은 상하의 벽을 허물고 동료애를 키울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공연 등 재밌고 흥겹게 나눔을 실천하는 기특한 동아리다.

대기업인 오리온을 제외하고 스낵과자에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인증을 받은 곳은 도울F&B가 유일하다. 대기업에서도 따내기 힘든 인증을 직원 40여명에 불과한 중소기업이 이뤄낸 것이다. 그래서인지 생산직의 이직률을 제외하면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는 일이 없다. 기숙사와 식당, 헬스장 등 복지시설은 기본, 자기계발비도 적극 지원한다. 2000년대 들어 서면서 회사가 매년 꾸준히 성장해 공장까지 신축했다. 생산물량이 늘면서 매출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도울F&B는 인재 채용 시 적성검사를 통해 업무를 배당한다. 때문에 특별한 스펙이 필요치 않으며 리더십 있고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 직원이 많지 않은 만큼 자기 분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즉시 출품할 수 있다. 조금 부족한 실력은 회사가 지원해 주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른 사람이 더 클 수 있는 기업, 도울F&B다.



오기철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부장 naya@sbk.or.kr

카라바조(Caravaggio) '예수의 매장'



17세기 들어서면서 유럽은 커다란 정치적 격변을 겪게 된다. 새로 등장한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프랑스 왕권은 교황의 통제로부터 이탈한다. 이에 가톨릭 교회는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시각 이미지, 즉 미술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로마의 일 제수 교회나 성 이그나티우스 교회의 천장화는 그러한 가톨릭 교회의 요청에 부응해 제작된 대표적 작품이다. 안드레아 포초(Andrea Pozzo)의 '성 이그나티우스의 영광'이나 조반니 바티스타 가울리(Giovanni Battista Gaulli)의 천장화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천국의 문이 교회당과 연결돼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교회는 그와 같은 기적적인 효과를 연출함으로써 대중들의 신에 대한 복종을 유도했다.

카라바조(Caravaggio)는 이러한 바로크 시대의 교회 요청에 가장 걸맞은 화가로서 그가 그린 그림들은 한결같이 드라마틱한 매력을 지녔다. 그가 1604년에 완성한 성화(聖畵) 한 점은 이 시대 가톨릭 교단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된 대표 작품이다.

그림을 보면 지금 막 두 명의 남자가 한 젊은 남자의 시체를 두꺼운 돌판 아래로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화폭에는 보이지 않는 구덩이 속의 사람들에게 축 늘어진 시신을 건네고 있다. 시신을 받는 사람의 위치는 이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관람자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인부가 된 듯한 착

각에 빠지게 된다. 시신이 아주 건장한 근육질인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생애가 고단한 노동으로 점철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아마도 노동을 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숨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시신을 들고 있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오른쪽 남자는 맨발이며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 그 역시 같은 노동자 계급으로 보인다. 그 뒤의 비탄에 잠긴 세 여인은 아마도 죽은 자의 가족인 것 같다. 슬픔에 가득 찬 눈으로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왼쪽 여인의 이마에도 마찬가지로 깊게 주름이 패여 있다.

보는 이의 심사를 착잡하게 만드는 이 작품은 무엇을 주제로 그린 것일까. 그림의 제목은 놀랍게도 '예수의 매장'이다. 성스러운 분위기와는 담을 쌓은 듯한 이 그림이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사건 중 하나를 묘사한 그림이라니. 관람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근육질의 무식쟁이 예수, 주름살의 성모, 남루한 물골을 한 예수의 근친들. 화가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중세 이래 성화의 엄숙하고 성스러운 묘사의 전통을 바꾼 듯하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카라바조다.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기록에 의하면 그는 대단히 난폭하고 배짱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특히면 저잣거리에서 싸움질을 해댔고 급기야 살인까지 저질러 평생을 이곳저곳 쫓기며 방랑하다 객지에서 횡사한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었다. 게다가 미소년을 사랑한 동성애자였던 그는 당대의 온갖 규범과 권위에 도전한 그야말로 삐딱선 타는 데 달인이었다.

- 1 카라바조, 예수의 매장, 1602~1604년, 캔버스에 유채, 300×203cm, 로마 바티칸미술관
- 2 카라바조, 예수의 매장, 부분
- 3 카라바조, 마리아의 죽음, 1606년, 캔버스에 유채, 369×245cm, 파리 루브르박물관



빠딱한 시선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 장엄하고, 아름답고, 영웅적인 전통적 인간상을 거부했고 대신 평범하고 하찮은 일반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묘사했다. 제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도 그의 붓끝을 거치면 악당이나 노동자의 몰골을 면하기가 어려웠다. ‘마리아의 죽음’에서 그는 성모 마리아를 통통 부은 맨발의 시체로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창녀를 그 모델로 했더니 그림을 주문한 교회로선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러나 비천한 몰골의 성자들과 동성애의 이미지로 가득 찬 그의 그림들이 당대 및 후대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렘브란트(Rembrandt)조차 그의 그림 앞에서는 옷깃을 여밀 정도였다. 무엇이 이 난폭하고 교양 없는 화가에게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준 것일까. 그는 자신의 등장 인물들을 칠흙 같은 어둠 속에 묘사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광원(光源)에서 투사된 빛을 받아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마치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는 그림의 주제를 드라마틱하게 부각시키는 데 그만이었다. 그의 성공요인은 또 있었다. 그는 선배들처럼 사건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적 묘사를 최소화하고 사건의 요체만 간략하게 묘사했다. 단순 명료함을 선호하는 대중들에게 이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다면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카라바조

의 그림이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교회로부터 이탈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성자의 모습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상화되고 미화된 모습의 성자가 아니라 저 잣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만만한 친구’ 같은 모습의 성인이라야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간 어린 양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인간이 세계의 중심임을 선언한 르네상스의 도도한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도 성화의 탈권위화를 부추긴 배경이 됐다. 결국 카라바조의 탈권위적 종교화는 비록 그 표현이 과격하긴 했지만 눈덩이처럼 커가는 기독교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던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 부응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충격 요법이 필요했던 당시 가톨릭 교회로서는 내심 카라바조의 과격한 표현을 반겼는지도 모른다.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라도 신도들이 예배당으로 몰려든다면 교회로서도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



정석범

미술사학자
sukbum@naver.com
프랑스 파리1대학 미술사학 박사, 현재 홍익대 대학원 출강.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원」 등이 있다.



바다와 섬의 절묘한 조화

청산도 봄의 왈츠 세트장

물감을 풀어 놓은 듯 노란 빛으로 가득한 유채꽃



오래 섬을 떠돈 자에게 바다 냄새는 환각과 같다. 때때로 끈적끈적하고 뭉개진 듯해서 만져질 것만 같은 이 냄새에 취해 나는 무던히도 배를 탔다. 생각해보면 바다 냄새는 단순히 바다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칠이 벗겨진 갑판의 오래된 페인트 냄새며, 섬사람들의 살냄새와 차도선 바닥에 착 달라붙은 생선 비린내 따위가 적당히 버무려진 아늑한 냄새가 바로 바다 냄새였다. 그리고 이 냄새는 종종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골방까지 따라 들어와 불쑥불쑥 나의 후각을 자극하곤 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나의 섬 여행도 찾아진다. 희한하게도 봄이 되면 나는 완도 땅 청산도를 찾곤 했다. 청산도는 갈 때마다 그 느낌이 달랐다. 딱 한 번 여름에 간 것을 제외하면, 네 번이나 봄에만 청산도를 찾았는데, 그 때마다 봄빛이 달랐다. 어떤 봄은 보리밭이 유난히 아름다웠고, 어떤 봄은 막 돋아난 초록의 생기 속에서 유채꽃이 두드러졌다. 들핀의 자운영이 고왔던 봄이 있었는가 하면, 물 댄 다랑논 굴곡에 반한 봄도 있었다. 이래저래 청산도는 갈 때마다 좋았고 사방 어디를 봐도 좋았다. 예부터 완도에서는 청산도를 '선산'(仙山)이라 해 신선의 섬으로 불렀고, '청산여수'라 해 청산도와 여서도의 빼어난 경치를

칭송해왔다. 언젠가 청산도 당리를 찾았을 때 물에서 온 여행자 몇 명은 영화 '서편제'를 재연하듯 황토 돌담길을 따라가며 진도아리랑을 흥얼거렸다. 영화에서 유봉 일가가 걸어간 바로 그 길에서. 길 끝에 보이는 동화 같은 집은 드라마 '봄의 왈츠'를 찍었던 세트장이다. 네 번째 청산도 여행을 갔을 때 때마침 섬에서는 '봄의 왈츠'를 촬영하는 중이었다. 사실 '봄의 왈츠'를 촬영하기 전에 나는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윤석호 PD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청산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왔고, 나는 아는 대로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물에서 먼 여서도 또한 매력적인 섬이다. 옛날 사람들은 여서도를 일러 '여자가 애 배서 나오는 섬'이라고도 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매일 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날씨에 따라 오랫동안 섬에서 발이 묶일 때가 많았다. 또한 과거에는 제주도 잠녀들이 여서도로 원정 물질을 오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 섬에 오면 잠녀들은 상당기간을 머물러야 했으니 제주도 처녀 잠녀와 여서도 총각 어부가 눈이 맞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실제로 여서도에는 제주도에서 시집왔다는 할머니들이 적지 않다. 이곳의 돌담은 가히 예술적이다.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삭풍이라는 자연 재앙을



2



3

1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타워는 매일밤 환상적인 레이저쇼를 펼친다. 2 보길도 세연정(명승 제34호)은 고산 윤선도가 어부사시사를 창작하고 읊었던 무대다. 3 남해의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청산도 당리마을, 돌담길을 따라 산책하면 마을 구석구석 고향에 온 듯한 정겨움이 느껴진다.

견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낙도의 환경이 만들어낸 생활의 예술이 바로 여서도 돌담이다.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에서도 이곳의 돌담을 보고 '한국의 마추픽추'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미로와도 같은 이곳의 돌담은 내가 다녀본 섬 가운데 단연 으뜸이라 할 만하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보길도는 모두 알다시피 고산 윤선도의 문학과 삶이 서린 섬이다. 고산이 남긴 문화유산만도 세연정(洗然亭)을 비롯해 곡수당(曲水堂)과 낙서재(樂書齋), 동천석실(洞天石室)은 물론 작품인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詩)까지 보길도를 이야기하자면 윤선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선도(1587~1671년)는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항복을 고하는 치욕을 당하자 보길도에 내려와(65세) 부용동에 낙서재라는 집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 부용동 어귀에 정자를 지어 손님을 접대하고 풍경을 즐기며 쉬었는데, 이것이 지난 1990년대 초 복원한 세연정이다. 세연정은 담양의 소쇄원과 더불어 조선시대 최고의 정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러나 보길도의 매력은 윤선도의 유적과 문학에만 있지 않고, 저 바다와 해안을 따라 얼마든지 존재한다. 청별항에서 시작되는 해안의 절경은 서쪽으로는 술섬, 망끝 전망대, 보옥리 뽕죽산까지

24km나 계속되며, 동쪽으로는 예송리 해수욕장과 통리 해수욕장, 중리 해수욕장, 백도리까지 10여km쯤 이어진다. 보길도의 서쪽 해안을 따라가면 부항리·정동리·정자리·선창리·보옥리 등의 해안마을과 장사도·노록도·넙도·명섬·닭섬·미역섬 등의 비경이 차례로 펼쳐진다. 최근 보길도에는 노화도와 연결하는 연도교가 새로 생겨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완도에 온 여행자들의 상당수는 섬 여행이 목적이지만, 완도에도 볼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만일 다도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편하게 구경하고 싶다면 완도타워에 오르는 것도 괜찮다. 이곳의 첨탑은 76m에 이르는데 전망층에는 늘 다도해를 보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완도와 다리로 연결된 장도 장좌리 앞바다에는 장보고의 역사와 유적이 깃든 청해진 유적지가 있고, 완도와 연육교로 연결된 신지도에는 명사십리로 유명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다. 백사장이 너무 넓어서 종종 이곳에서는 모래밭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도 찾아오곤 한다. 남도

글 이용한 시인, 작가 / 사진협조 완도군청

'길 위의 시인'으로 지난 13년간 국내외 오지 혹은 섬을 떠돌며 글을 써왔다. 1995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안녕, 후두둑 씨』, 『정신은 아프다』, 여행에세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등을 떠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중 FTA, 조급증 버리고 신중한 접근을

지난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그동안 '세계의 값싼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은 이제 '세계의 시장'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가 된 중국의 이러한 부상은 무역의존도가 80%를 상회하는 한국에 '중국전략'의 수립을 요구한다. 일각에선 한·중 FTA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지난해 한국 제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 것도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적 근거로 제시된다.

이에 반해 중국과의 FTA가 아직은 성급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미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한미 FTA, 한·EU FTA를 발효시켜 그 효과를 실현해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對중 수출 대부분이 현지투자 기업으로의 원자재·중간재 수출이고 이들은 이미 낮은 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중국과의 FTA를 통한 경제적 실익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식품안전성이 검증 안된 중국 농수산물 수입 급증에 대한 국민건강권 위협, 농수산업의 심각한 피해 등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을 왜 한국과 FTA를 하고 싶어 하는가. 중국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한미 FTA,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을 허브로 세계 최대의 양대 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다. 중국은 뉴질랜드를 제외하곤 선진국과의 FTA가 없다. 개도국들에게 중국의 외교영향력을 강화하는 도구로써 FTA를 써 온 중국이다. 서비스 개방, 투자규범 강화 등 선진국들이 FTA에서 관심을 보이는 의제에 중국은 해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미적거리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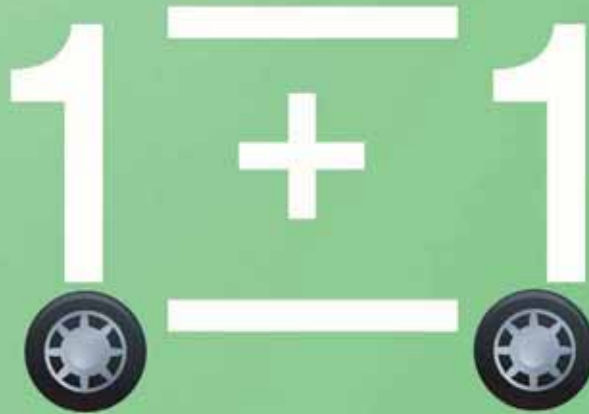
농업 피해, 국민건강권 침해 우려는 그간의 FTA 추진과정에서도 논쟁거리였다. 협상을 통한 일차 방어막, 국내 정책을 통한 이차 방어막을 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딛고 한국이 한·중 FTA를 결심하려면, 중국은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협상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때문에 중국과의 FTA 추진여부는 어떠한 형태의 FTA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분쟁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 수출증대를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환율조작 논란에 대해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자존심 싸움을 하겠지만 불가안정 등 국내적 이유를 들어 결국 자국 화폐를 상당한 정도로 평가절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면, 한국의 對중국 무역과 투자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던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계 기업의 청산절차, 분쟁 해결, 기업비밀 보호 등이 중요한 통상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낮은 수준이라도 좋으니 FTA를 출범시켜 일단 타결하고, 나중에 한국의 관심사를 반영한 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는 2단계 접근방식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전술에 말려들어 가는 셈이다. 한국과 중국 가운데서 중국이 좀 더 한·중 FTA가 급하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를 제대로 추진하려는 협상의제가 균형있게 제대로 설정돼야 한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둘이 만나
대한민국 도로교통안전의
더 큰 터전(田)을 이루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업무도 관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2011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홍보·방송·연구 및 기술개발에 운전면허업무까지

도로 위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더욱 밝혀 나갈 도로교통공단

당신이 주인공인 안전하고 행복한 도로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 안내전화

길눈이 클 1588-5779



GYEONGJU WORLD CULTURE EXPO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천년의 이야기

사랑, 빛 그리고 자연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빛과
별 하나에 자연과
별 하나에 이야기, 이야기...

2011년 8월,
천년고도의 밤하늘을 수놓는
천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선라 삼보 가운데 하나였던 황룡사 구층 목탑

선덕여왕이 죽은 후의 아홉 나라로부터 신라를 지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645년 건립한 황룡사 구층 목탑은 높이가 약 82미터로 당시 동양 최고(最)의 목조건축물로 꼽힌다.
이 탑은 1238년 고려 고종 25년 몽골의 침략으로 안타깝게 모두 불타 버렸다. 그로부터 7백여 년이 지난 후
황룡사 구층 목탑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인 경주타워로 다시 태어났다.

2011경주세계문화엑스포 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1

주제 | 천년의 이야기 - 사랑, 빛 그리고 자연

기간 | 2011. 8.12~10. 10 (60일간)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